

연구총서 2002-08

•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 현 준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통일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북한은 '6·29 서해사태'를 일으켰다. 이 사태 직후 북한이 재빨리 유감을 표명하고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남북 화해 무드는 지속되었지만 우리에게 왜 북한은 돌발적인 상황을 만듦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국가'라는 누명을 쓰는가하는 의문을 던져준다. 이러한 의문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북한의 대남 정책에 어떤 패턴이 있지 않는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I. 서론

북한은 수령주의에 입각, 미국을 '악의 화신'으로 규정하고 남한을 '그의 하수인'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가 북한핵 문제를 중심으로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져있지만 생산성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존재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구원'과 '해방'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인식은 대남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1950년에는 '민족 해방전쟁'을 벌였고, 이후에도 수많은 도발을 자행하였다. 그 배경은 역시 '남한 경시풍조' 때문이다. 북한은 수시로 '민족공조'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입장의 수용을 의미한다. 김정일이 남한방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약속불이행에 대한 '불감증' 또는 '남한경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떻든 북한이 남한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비상식적이다. 수시로 남한의 최고지도자에 대해 위협을 가하려 하였고, 남한정세에 개입하

여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켜 보려 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때문에 김대중 정부는 ‘대북 퍼주기론’으로부터 ‘북한대변자’까지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대북 지원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잠수정 침투, 서해사태, 미사일 수출, 핵개발 등 김대중 정부의 기대와는 반대의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김대중 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 북한의 변화는 커녕 남한이 오히려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 정책은 주기적으로 강경과 온건사이를 ‘반복’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증명해 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설명에 동원되는 구체적인 사안은 1968년 ‘1·21 사태’와 ‘7·4 남북공동성명,’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과 ‘이산가족 시범상봉,’ 1987년 ‘KAL858기 폭파사건’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999년 ‘6·15 서해사태 사건’과 ‘6·15 남북공동선언’ 등이다.

II. 연구를 위한 전제

해방 이후 남북관계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주도권 장악 투쟁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북한은 전쟁방식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까지 범하였다. 한국전쟁은 남북한에게 엄청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를 안겨주었다. 전쟁의 상처는 대를 이어 전해짐으로써 남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은 현재까지 잔존해 있고,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 불행한 사실은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에도 수많은 도발을 자행함으로써 남한의 대북 불신을 고착화시켰다는 점이다.

계급론에 입각한 사회주의의 세계화와 민족론에 입각한 통일국가 수립이 중첩적인 형태로 나타난 북한의 대남 강경 정책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남한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북한이 대화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해방이후부터 북한은 남북합작을 주장하였고, 한국전쟁 이후에도 평화와 대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남한은 철저히 통일전선전술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후술하겠지만 통일전선전술은 친북 인사 확보를 위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채용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남한의 경계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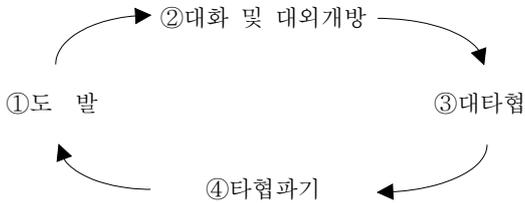
한국전쟁 이후 조성된 남북간 긴장은 1970년에 접어들면서 깨졌다. 남북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1971년 적십자 회담을 시작으로 물꼬가 트인 남북관계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85년 남북이산가족 상봉,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등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북한의 행태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① 중요한 남북간 타협 전에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 ② 남한에 대한 도발 이후 이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의 대화 제의가 등장하고, 남한은 이를 그대로 또는 수정하여 수락한다. ③ 남북대화가 시작되면 우여곡절을 거치지만 역사에 남을 만한 대타협이 이루어진다. ④ 북한은 남북대화와 거의 동시에 대외개방 정책을 도입한다. ⑤ 대타협은 이내 중지되거나 파기된다 등이다.

북한의 대남 정책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바, 그것은 <그림-1>처럼 ‘무력도발→대화제의→대타협 및 대화, 대외개방→대화 파기 및 중지→무력도발’이라는 사이클(cycle)이다. 필자는 북한 대남 정책의 특징을 대남 ‘공격·포용(hit and clinch)정책의 반복 경향(tendency)’으로 규정하려 한다. 이 전제에 근거한다면 북한의 대남

도발 후에는 대화와 대타협에 대비해야 하고, 대타협 후에는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를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림 1> 대남 정책 반복고리



Ⅲ. 북한의 대남 인식

북한이 남한을 정당한 상대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대남 인식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남한을 ‘미제식민지’로 규정하고, ‘해방’시켜야 할 대상으로 상정하는 한편, 남한정권을 ‘괴쑈정권’으로 규정하고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부터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이 도출된다. 한반도의 분단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 북한의 대남 인식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간 갈등도 남한의 일방적인 북한지지가 없는 한 완전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 미국의 ‘(신)식민지론’

해방직후 김일성은 미국이 한반도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고 ‘괴뢰’ 정권을 세우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시각은 이후 북한의 대남 인식 기초가 되었다. 김정일 시대인 현재까지도 이러한 관점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한을 식민지로 보는 시각 때문에 북한은 일제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항일무장독립투쟁을 한 것처럼 ‘미제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항미무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핵·미사일 문제로 미국과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며 ‘선군정치’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도 이로부터 출발한다. ‘민족론’ 및 ‘민족해방론’을 주장하는 이유도 유사하다.

2. ‘파쇼론’

남한정권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은 ‘파쇼’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파쇼타도’와 ‘민주정권 수립’을 주장한다. 민주정권 수립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파쇼론’은 남한 최고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도록 한다.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전술적 차원’에서 이러한 성격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 인식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IV. 북한의 대남 정책 목표

1. ‘북한식 사회주의’ 확산

북한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전한반도의 공산화’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지배정당인 노동당 규약 전문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주주의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1998년 수정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당의 통일전략인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최종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김정일은 이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만일 이 조항이 폐지된다면 ‘하나의 조선’이라는 통일을 포기하고 ‘두 개의 조선’이라는 분열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어날 것을 김정일이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이 전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계급론적 입장에서 전한반도를 사회주의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반미자주국가’를 만들려는 이유 때문이다.

2. 남한 고립화

북한 대남 정책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는 남한 고립화일 것이다. 해방의 대상인 남한이 미·일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체제인 한미동맹을 비난하고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공조 파괴와 관련 김일성은 ‘갓끈 전술’을 주장하였다. 남한은 갓과 같아서 양쪽 갓끈인 미국과 일본이 끊어지면 갓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무너진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북한은 한·미 공조 및 한·일 공조 파괴를 위해 지대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북한은 남한내에 반미·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해방 직후 일정기간 반일 분위기를 조성한 것을 제외하고 북한은 반미 분위기 조성에 매진하였다. 북한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제식민지론’ 때문이다.

3. ‘민족공조’ 확대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는 전통적인 통일전선 전술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자신의 권력강화를 위해, 통일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였다. 통일전선이라는 용어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기점으로 ‘민족대단결’로 개념화 되었다. ‘민족대단결론’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및 ‘6·15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민족공조’ 논리로 바뀌었다. 북한이 ‘민족공조’를 강조한 이유는 이 용어가 남한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즉,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남 통일전선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물론 북한이 공식적으로 민족을 강조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6년, 김정일이 ‘우리민족 제일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V. 북한 대남 정책의 ‘반복’ 사례

1. ‘청와대 기습사건’과 「7·4 남북공동성명」채택

가. 무장군인 직접 침투

박정희를 ‘파쑸’로 비난하던 북한은 1968년 1월 21일 민족보위성(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124군부대 31명을 직접 침투시켜 청와대를 기습하려다 실패하였고, 동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울진·삼척지역에 120여명의 무장군인을 침투시켜 남한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어서 북한은 1969년 12월 11일 KAL기를 납치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1967년 당 제5기 15차 전원회의를 통해 시작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군부의 충성경쟁, 남한내 ‘반박정회’ 정서, 월남에서의 공산베트남의 득세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나. 「7·4남북공동성명」채택 과정

김일성은 1971년 8월 6일 남한의 민주공화당 등 모든 정당·대중단체·인사와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8월 12일 남북이산가족찾기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

하였고, 북한이 이를 수락,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해방 이후 최초로 남북한 당국자가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결실이 가능했던 이유는 김일성과 박정희 모두가 민족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다. 남북조절위원회 중지

남북조절위원회는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본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장기집권계획인 ‘10월 유신’을 발표하였다.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해산되었다. 또한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정치적 이용문제가 최초로 불거졌다.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구국의 결단’으로 미화시켰지만 개인 독재의 장기화 정책임이 분명하였다. 박정희는 7·4남북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7월 5일 반공교육을 계속 할 것을 지시하였고,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였다.

북한도 1972년 12월 25일 주석제를 포함한 사회주의헌법을 공포하였다. 북한이 강력한 권력구조를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헌법을 공포한 계기가 남한의 10월유신에 대한 대응인가의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김일성이 사회주의헌법 채택에 앞서 행한 연설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에서 밝힌대로 “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내외적대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헌법 개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남북간에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박정희는 1973년 6월 23일 UN동시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7개항의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골자로 한 ‘조국통일5대강령’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73년 8월 8일 일본 동경에서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하였다. 김대중은 1971년 4월 27일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의 유력한 라이벌이었다. 북한은 1973년 8월 28일 박정희의 ‘6·23선언’이 두 개조선 노선의 공개적 선포라는 이유로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대중납치사건이 원인이었다.

2. ‘아웅산 테러’ 사건과 최초의 ‘이산가족상봉’

가. 남한 요인 테러

북한은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를 방문중이던 전두환을 비롯한 한국정부의 요인들을 테러하기 위해 아웅산묘소에 폭탄을 장치, 폭발시켰으나 전두환 제거에는 실패하고 정부관료 4명을 포함해 17명을 사망케하고 14명을 부상시켰다. 북한은 자신의 소행임을 부인했으나 1983년 11월 4일 버어마 정부는 북한의 소행임을 확인하였다.

북한이 남한요인 테러를 자행한 이유는 김정일의 대남 정책 실험 유혹, 전두환의 남한 내에서의 인기 부족 등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및 예술단 공연

북한의 전두환 암살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남한내에 ‘반북분위기’만 고조시켰다. 전두환 정권은 북한의 호전성을 더욱 부각시켜 정권안보에 이용하려 하였다. 북한은 요인 암살로 인한 남한내 반북분위기 반전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1984년 1월 11일 ‘남한당국’을 포함한 3자회담을 제안하고 ‘서울당국’에 보내는 서한을

채택하였다. 남한은 동 일자로 남북한간 직접대화를 강조하고 남북고 위급책임자회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성사되지 못했고, 남한에서는 큰 수해가 발생하였다. 북한 적십자사는 9월 8일 남한의 수해에 대해 구호물자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체제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였지만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계기 마련을 위해 9월 14일 이를 수락하였다. 이를 통해 9월 18일 판문점에서는 6년 9개월만에 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고, 9월 30일 인천항과 북평항에 수재물자를 실은 북한 화물선이 도착하여 10월 4일 하역이 완료되었다.

수재물자 수수를 계기로 남북 적십자회담이 재개되었고, 8차 본회담에서는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자 30명 및 진행위원 20명 등 총 151명이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역사상 최초로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 졌고, 서울과 평양에서 예술공연이 있었다. 이것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이산가족 상봉과 각종 상호방문의 표준이 되었다.

다. 적십자 회담의 중지

민족의 숙원사업인 이산가족 상봉은 애석하게도 1회에 그치고 말았다. 역사적인 1986년 2월 26일 평양에서 개최기로 한 제11차 남북 적십자회담은 1986년 1월 20일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경험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상봉의 교과서가 되었다.

3. 'KAL기 폭파사건'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가. KAL기 폭파사건

1987년 12월 16일의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해 상공에서 한국의 중동근로자들을 태운 KAL858기가 공중폭발하여 115명의 무고한 인명이 사망하였다. 더구나 이것이 북한의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소속 김현희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남한 주민들의 분노는 매우 컸고,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의식도 보수화됨으로써 대통령선거에서 집권당 후보인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물론 이것은 '조작'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고,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이 사건은 북한이 남한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북풍'의 원조가 되었다. 북한이 비행기를 폭파한 이유는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북한은 남한과 피나는 체제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위상을 세계 속에 알리는 계기가 되는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는 것이 자연스런 행동일 것이라는 점이다. 비록 이러한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북한의 속성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 남북고위급회담 전개 및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KAL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1988년 1월 1일 '남한집권자'와의 대화를 희망하였다. 3월 8일에는 북한이 남북연석회의 예비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장기간 침묵을 지키던 남한은 1988년 6월 3일 북한측에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은 6월 6일 남북연석회담 준비를 위해서라면 당국자회담도 고려한다고 화답하였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12월 28일 강영훈 총리가 남북고위당국자(총리급) 회담을 제안하였고, 1989년 1월 16일 북한은 남북총리급회담을 수락하면서 “2월 8일에 차관급예비회담을 갖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의제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역사상 최초로 남북한 총리가 남북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이 시작되었다. 1990년 9월 4일 남북고위급회담 1차회담으로부터 1992년 9월 18일 제8차 회담까지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은 역사적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 ‘합의서’는 가장 완벽한 남북간 합의로서 이것만 잘 실천되면 ‘사실상(de facto)’의 통일상태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미이행

남북고위급회담은 8차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1992년 12월 19일 북한은 ‘1993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이인모 노인 북송,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는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몰려올 수 있는 남북대화보다는 대화단절을 통한 체제단속의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4. '6·15 서해사태'와 남북정상회담

가. '6·15 서해사태'

북한은 1999년 6월 15일(6월 7일부터 월선) 서해 NLL을 침범, 남한해군과 군사적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남한은 물론 주변국을 놀라게 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김대중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유용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북한의 대남 도발 이유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나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닌었던가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남한의 군사정부에 대한 도발 이유와는 약간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즉, '1·21 사태'나 '아웅산테러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이 남한군사정권에 대한 응징의 성격이 강했다면 '6·15 서해사태' 사건은 김대중 정부의 '민족공조'에 대한 의지의 시험이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렇다고 북한의 대남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다.

나.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1999년 '6·15 서해사태'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지속되었다. 북한은 6월 21일부터 예정된 북경 차관급회담의 참석의사를 6월 17일 밝혔다. 대화지속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었다. 그러나 차관급회담은 결렬되었다. 남한의 '6·15사태'에 대한 집요한 사과요구 때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은 9월 북미대화가 지속되는 한 향후 3년간 미사일시험발사를 유예하고 EU와의 관계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세계에 공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북

한은 2000년 1월 4일 이탈리아와 수교하였다. 북한의 개방적 태도를 목도한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월 20일 새천년민주당 창당대회에서 남북정상회담 제의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후 북한은 남한의 진의 파악에 나섰고, 남한의 진의가 확인되자 이를 공식화시켜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3월 9일 베를린에서 대북 SOC 지원을 골자로 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3월 17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박지원과 송호경이 ‘밀사외교’를 시작하였고, 4월 8일 남북 정상회담을 6월 12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6월 12일보다 하루 늦은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세계정치 무대에 등장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는 소독을 올렸다. 남북정상회담은 ‘6·15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회동을 마무리지었다. 그 내용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 친척방문단 교환 및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당국간 회담 개최, ‘적절한 시기’의 김정일 답방 등이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유는 김정일 위상 강화, 통일주도권 확보, 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교두보 확보 등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큰 틀에서 순탄한 길을 걸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8차례의 장관급회담, 1차례의 국방장관 회담, 3차례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4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 및

4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금강산육로관광
가시화,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 특구 지정 등 수 없이 다양한 회담
및 합의이행이 있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은 ‘6·15 공동선언’ 이후 비교적 잘 지켜진 회의
로서 8회 실시되었다. 주 합의 내용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 남북경제
협력추진위원회 활성화,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 문제, 군사실무회담
재개 문제, 금강산관광 활성화 문제, 임진강 공동개발 문제, 개성공단
착공 문제, 한국전쟁 시 실종자 생사 확인 문제, 부산아세안게임 참가
문제,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 문제 등이었다. 아울러 국방장관회담
및 7차의 군사실무회담이 실시되었다.

다른 어느 분야보다 경제분야는 남북간 협력이 잘 이루어 졌다.
2000년 9월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을 시작으로 2002년 11월 14일
까지 3차례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경
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1차적으
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단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되도록 조치가 취해졌고, 11월 13일 개성공업지구 선포
및 11월 20일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등이 이루어졌다. 2002년 12월
하순 개성공단 건설이 착공될 예정이다.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
지 북한의 실세인 장성택을 비롯해 박남기 등이 8박 9일간 남한경제
실태를 고찰하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이유는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때문이라
는 분석이 주류이다. 물론 북한이 경제난 해결과 대미관계 개선이라
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채택한 것도 사실이지만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논리이다. 특히 ‘7·1 경제
관리개선 조치’나 ‘신의주특구 지정’ 등은 대표적인 대북 포용정책 성
과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VI. 결 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남북관계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또 하나의 '사변'이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없다는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 민족은 이제 '한반도문제를 한반도화'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긍심은 지난 2002년 1월 29일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후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써 현저히 약화되었다. 미국이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는 민족통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다시 자리를 잡았다. 이 즈음 비관론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동년 6월 29일 발생한 '서해사태'이 그것이었다.

통일에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은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는 논리가 설득력 있게 회자되었다. 북한은 우리의 대북 지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왜 북한은 주기적으로 대남도발을 자행하는가라는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북한의 대남 행태가 2중적이라는 분석은 많아 왔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내는 논리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장 가설부문에서도 전제했듯이 북한의 대남 정책에 어떤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에서 대남정책 '반복경향'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이 전제가 타당하다는 결론

에 도달했다.

첫째, 북한은 적화통일 정책을 고수한 가운데 무력도발을 시도한다. 북한은 남한 최고통치권자에 대해 1968년 1월 21일, 1974년 8월 15일, 1983년 10월 9일 등 3회에 걸쳐 위해를 가하려 하였다. 둘째, 북한은 도발행위를 자행한 이후 남한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남한의 호응이 있으면 대화에 임하고 대타협까지도 이끌어 낸다. '7·4 남북공동성명,'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북한은 대타협을 중지하거나 파기한다. 북한은 대타협을 온갖 이유를 붙여 중지한다. 결국 북한의 대남정책을 대남 '공격·포용(hit and clinch)정책의 반복'으로 규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 대남 정책 변화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대남도발 후 대화 제의 및 대화의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에는 2002년 6월 29일 서해사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7월 25일 대화제의를 해왔다.

둘째, 남한정권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 대응이 존재하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취함에 따라 북한은 '6·15 공동선언' 채택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대화를 중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군사정권이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과는 다른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북한의 대남 도발 이후에는 대화 및 대타협에 대비해야 할 것이고, 대타협 이후에는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에도 북한이 '공격·포용(hit and clinch)정책의 반복' 경향에 맞는 행동을 할지는 미지수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구태의연한 냉전적 정책을 지속하기에는 그들의 경제사정이 너무 열악하고, 향후에는 남한

의 어떤 정권이 등장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바, 남한을 ‘식민지파쇼’로만 몰아부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
이다. 현재 우리의 임무는 북한의 ‘반복적’ 대남 정책을 ‘발전적’ 대남
정책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고안해 내는 것이다.

- 목 차 -

I. 서론	1
II. 연구를 위한 전체	3
1. 선행연구 고찰	3
2. 연구를 위한 분석 틀	5
III. 북한의 대남 인식	13
1. 미국의 ‘(신)식민지론’	13
2. ‘과쏘론’	17
IV. 북한의 대남 정책 목표	19
1. ‘북한식 사회주의’ 확산	19
2. 남한 고립화	23
3. ‘민족공조’ 확대	25
V. 북한 대남 정책의 ‘반복’ 사례	30
1. ‘청와대 기습사건’과 『7·4 남북공동성명』 채택	30
2. ‘아웅산 테러’ 사건과 최초의 ‘이산가족상봉’	39
3. ‘KAL기 폭파사건’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44
4. ‘6·15 서해사태’와 남북정상회담	49
VI. 결 론	62
참고문헌	66

- 표 목 차 -

<표 1> 북한의 주요 대남정책 행태	9
<표 2> 북한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 사례	50
<표 3> 남북장관급 회담 일람	56
<표 4> 남북 군사분야 회담 주요 일지	57

- 그림 목 차 -

<그림 1> 대남 정책 반복고리	12
-------------------------	----

I. 서론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한반도 평화 무드는 2001년 1월 미국의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매우 유동적인 상황으로 변했다. 그 이유는 미국의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방지를 국가이익의 우선순위 1위로 설정한 미국이 對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벌여 승리를 얻어내고, 여세를 몰아 2002년 1월에는 북한·이라크·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 이의 축출을 위해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월 북한의 '핵개발 시인' 이후 핵개발 포기 이전에는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과 불가침조약만이 해결책이라는 북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섬으로써 한반도 위기지수는 1993~4년에 발생한 한반도 위기수준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위기지수가 높다고 해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북한의 세계관과 문제해결 방식간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6·25 전쟁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와 통일을 이루고 살아야 할 북한은 현재 '김일성주의'를 가치의 척도로 삼고 있는 국가이다. 북한은 수령주의에 입각, 오히려 미국을 '악의 화신'으로 규정하고 남한을 '그의 하수인'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가 북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져있지만 생산성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존재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구원'과 '해방'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인식은 대남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1950년에는 '민족해방전쟁'을 벌였고, 이후에도 수많은 도발을 자행하였다. 그 배경은 역시 '남한 경시풍조' 때문이다. 북한은 수시로 '민족공조'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입장의 수용을 의미한다. 김정일이 남한방문 약속을 이해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약속불이행에 대한

2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불감증’ 또는 ‘남한경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떻든 북한이 남한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비상식적이다. 수시로 남한의 최고지도자에 대해 위협을 가하려 하였고, 남한정세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켜 보려 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때문에 김대중 정부는 ‘대북 퍼주기론’으로부터 ‘북한대변자’까지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대북 지원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잠수정 침투, 서해사태, 미사일 수출, 핵 개발 등 김대중 정부의 기대와는 반대의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김대중 정부를 곤경에 빠뜨렸다. 북한 변화는 커녕 남한이 오히려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는 ‘발전하느냐’ 아니면 ‘반복하느냐’는 문제는 역사학의 근본적인 연구주제이지만 북한은 왜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김대중 정부와 정상회담까지 추진하고서도 이처럼 도발적인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김대중 정부를 곤경에 빠지도록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남한정부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관성있는 대남 인식이 존재하고 이러한 인식에 바탕한 대남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 정책은 주기적으로 강경과 온건사이를 ‘반복’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증명해 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설명에 동원되는 구체적인 사안은 1968년 ‘1·21 사태’와 ‘7·4 남북공동성명’,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과 ‘이산가족 시범상봉’, 1987년 KAL858기 폭파사건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999년 ‘6·15 서해사태 사건’과 ‘6·15 남북공동선언’ 등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북한의 대남 정책을 어떻게 구명할 것이냐에 한정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소신이나 방안은 제시되지 않는다.¹⁾

II. 연구를 위한 전제

1. 선행연구 고찰

북한의 통일정책은 대내 정책, 대외 정책, 대남 정책 등 3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 정책은 통일정책의 일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남 정책 연구는 통일정책과 혼동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도 주로 통일방안에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통일정책과 대남 정책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 정책 연구도 북한의 전략전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²⁾ 대남 정책은 대남 전략전술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남 정책은 고정적 측면이 강한 반면 전략과 전술은 가변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책은 공개적인 반면, 전략전술은 비공개적이고 비밀리에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아울러 연대기적인 입장에서 대남 정책을 분석하는 연구물들이 있다. 이것의 장점은 중요사건을 기준으로 북한의 특징적인 대남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대남 정책 추이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³⁾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북한의 대남 정책을 체계적으로 인식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
- 1) 필자는 개인적으로 북한은 ‘수령주의’만을 유일한 세계관으로 인정한 ‘비정상 국가’로 분류함. 그러나 이를 ‘정상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해서는 대북 포용정책이 유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2) 대표적인 연구는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전략』 (서울: 북한연구소, 1997) 참조.
 - 3) 대표적인 연구로는 허문영, “북한의 평화전략,” 김학성 외, 『한반도평화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60~72 참조.

4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또한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남 정책을 연구한 결과들이 있다.⁴⁾ 그러나 이 연구 역시 북한의 통일방안을 이해하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대남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북한의 대남정책과 관련, 정책의 변화 여부에 대한 연구가 많다.⁵⁾ 주 논제는 북한이 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이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대남 정책 연구에 있어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본 연구도 이러한 방법을 채용할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연동되는가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은 것 같다.⁶⁾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의 대남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하는 연역적인 방법을 채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방법론 또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사건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과 드러나지 않은 사건, 예를 들면 이면합의나 밀사행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모험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본 연구를 시도하려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발전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 대표적인 연구는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pp. 512~513 참조.

5) 최근의 연구로는 최완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성찰적 접근,” 『남북한 관계의 회고와 전망』, (2002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2002.7.25~27); 정규섭, “햇볕정책을 넘어서: 논쟁과 대안을 모색,” 『현대북한연구』, 제4권 2호(2001); 손호철, “대북 포용정책과 남남갈등,” 『남북한 관계의 회고와 전망』, (2002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2002.7.25~27) 등을 참고.

6) 요인분석을 통해 북한의 대남 정책을 연구한 저서는 정규섭, 『김정일체제의 대남정책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12) 참조.

2. 연구를 위한 분석 틀

해방 이후 남북관계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주도권 장악 투쟁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북한은 전쟁방식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까지 범하였다. 한국전쟁은 남북한에게 엄청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를 안겨주었던 것이다.⁷⁾ 전쟁의 상처는 대를 이어 전해짐으로써 남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은 현재까지 잔존해 있고,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 불행한 사실은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에도 수많은 도발을 자행함으로써 남한의 대북 불신을 고착화시켰다는 점이다.

계급론에 입각한 사회주의의 세계화와 민족론에 입각한 통일국가 수립이 중첩적인 형태로 나타난 북한의 대남 강경 정책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남한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북한이 대화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해방이후부터 북한은 남북합작을 주장하였고,⁸⁾ 한국전쟁 이후에도 평화와 대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남한은 철저히 통일전선전술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후술하겠지만 통일전선전술은 친북 인사 확보를 위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채용한 방법이였기 때문에 남한의 경계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조성된 남북간 긴장은 1970년에 접어들면서 깨졌다. 남북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1971년 적십자 회담을 시작으로 물꼬

7) 자세한 피해 내용은 김학준, 『한국전쟁』 (서울: 박영사, 1993), pp. 345~349 참조.

8)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구선생과의 합작제였음. 김일성, “김구와 한담화(1948년 5월 3일),”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300.

6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가 트인 남북관계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85년 남북이산가족 상봉,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등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북한의 행태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① 중요한 남북간 타협 전에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 ② 남한에 대한 도발 이후 이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의 대화 제의가 등장하고, 남한은 이를 그대로 또는 수정하여 수락한다. ③ 남북대화가 시작되면 우여곡절을 거치지만 역사에 남을 만한 대타협이 이루어진다. ④ 북한은 남북대화화 거의 동시에 대외개방 정책을 도입한다. ⑤ 대타협은 이내 중지되거나 파기된다 등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 사건, 10월 30일 울진·삼척 무장군인 침투 사건, 1969년 12월 11일 KAL기 납치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1971년 8월 6일 김일성은 남한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제 정당사회단체와의 접촉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동년 8월 12일 남한의 ‘대한적십자사’가 ‘남북간이산가족찾기운동’ 협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고, 8월 14일 북한적십자회가 이산가족, 친척, 친구의 자유왕래·토의 등도 포함된 판문점 회담을 역제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비록 적십자 회담이기는 하였지만 공식적으로 정부의 승인하에 남북이 한자리에 모여 회담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모태가 되어 1972년 5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극비 방북, 김일성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 당국간 대화채널 수립을 합의함으로써 1972년 7월 4일 역사적인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어 통일에 대한 한민족 전체의 열망이 컸으나 북한은 1973년 8월 28일 ‘김대중 납치사건’(1973.8.8)을 구실로 조절위원회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한편 북한은 6개년경제계획에 필

요한 자본조달을 위해 1972년부터 서방국가들로부터 외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둘째, 북한은 남한의 전두환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요인테러’ 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남한의 고급관료 4명을 포함한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하였다. 이후 북한은 1984년 1월 11일 ‘남한당국’을 포함한 ‘3자회담’을 제의하였고, 남한은 동일자로 남북고위급책임자회의를 역제안하였다. 북한은 9월 8일 북한 적십자회를 통해 남한 수재에 대한 구호물자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북한의 대남 수재물자 제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간 회담이 6년 9개월만에 9월 18일부터 개최되었다. 9월 30일부터 인천, 북평, 판문점 등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수재물자는 10월 4일까지 인도 완료되었다. 수재물자 인도를 계기로 남한은 10월 6일 이산가족 문제를 다룰 적십자 회담 재개를 북한에 촉구하였고, 북한은 10월 29일 이를 수락하였다. 1985년 5월 28일, 1973년 7월 이후 12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5월 30일에는 적십자실무대표 협의를 통해 예술단·이산가족고향방문단의 상호방문이 합의되었고, 남북의 고향방문단·예술단이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상호 방문하였다. 북한은 대남 수재물자 제공 제의 날짜인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통해 ‘합영법’을 발표하였다.

셋째, 북한은 1987년 12월 16일의 남한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인 11월 29일 미얀마 상공에서 KAL858기를 폭파시켰다. 이에 대한 남한의 반응은 격앙 그 자체였다. 김일성은 1988년 1월 1일 ‘남한집권자’와의 대화 용의를 표명하고, 남북연석회의를 제안하였다. 이어서 북한은 3월 8일 남북연석회의 예비회의를 제안하였고, 남한은 6월 3일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제안했으며, 북한은 남북연석회담 준비를 위한 것이라면 당국자회담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남한

은 1988년 12월 28일 강영훈 총리가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제안하였고, 1989년 1월 16일 북한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1989년 2월 8일부터 남북총리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1990년 9월 5일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5차회의에서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고, 1992년 2월 19일 발효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 부분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였다.

넷째, 1999년 6월 15일 서해에서는 NLL 근처의 ‘꽃게잡이’ 어장에서 남북한 해군이 교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교전으로 인해 북한군 20~30명이 사망하였고, 어뢰정 1척이 침몰하였다.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6월 17일, 6월 21일부터 예정된 북경 차관급회담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비록 결렬은 되었지만 6월 23일부터 차관급회담이 개최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남한의 대북 지원을 요청하였고, 유럽을 방문중이던 김대중 대통령은 3월 9일 ‘베를린 선언’으로 화답하였다. 3월부터 비밀 라인을 통해 남한의 박지원 밀사와 북한의 송호경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4월 8일에는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주지하듯이 그 결과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후 남북대화는 급물살을 탔으나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2년 6월에는 서해 NLL에서 ‘6·29 서해사태’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였으나 남한 정부는 서해사태가 ‘기획도발’이 아님을 강조하는 한편,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7월 25일 서해사태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제7차 장관급회담을 제의함으로써 대화는

지속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해 1998년 11월 21일부터 금강산관광을 시작하였고, 2000년부터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EU국가들과의 수교에 박차를 가했으며, 2002년에는 신의주 및 개성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였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 아래의 분류는 필자가 연구편의상 주요사건을 기준으로 임의로 설정하였다.

<표 1> 북한의 주요 대남정책 행태

도 발		대 화		대타협 및 개방		과 기		
제 1 기	'68. 1.21.	청와대 기습 기도	'71. 8.6.	김일성, 공화당 등과 접촉제의	'72. 7.4.	7·4남북 공동성명	'73. 8.28.	북한, 남북대화 중단 선언
	10.30 ~ 11.3.	울진· 삼척무 장침투	8.12.	한적, 적십자회담 제안	'72.	외자도입 본격화		
	'69. 12.11	KAL기 납치	⇒ 8.14.	북적, 회담 수용	⇒		⇒	
			8.20. ~ '73.7. 11.	적십자예비 및 본 회담				
			'72.5. 2.	김일성- 이후락 회담				

10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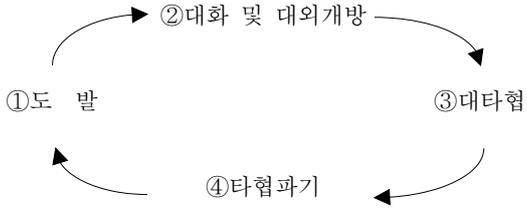
도 발		대 화		대타협 및 개방		과 기		
제 2 기	'83. 10.9.	아웅산 테러	'84. 1.11.	북한, '남한당국' 포함, 3자회담 제의	'85.9. 20~23.	최초의 고향방문 단예술단 상호방문	'86. 1.20.	북한, 대화 전면 중단
			9.8.	북적, 대남 수해지원 제의	'84. 9.8.	합영법 채택		
			⇒ 10.3.	북적, 직통전화 지속				
			10.29.	북한, 적십자 회담 예비회담 제안				
			'85. 5.29.	적십자 회담재개				
제 3 기	'87. 11.2 9.	KAL8 58기 폭파	'88.1.1	북한, '남한 집권자'와 대화 용의	'91. 12.13.	기본합의 서 합의, 채택	'92. 12.1 9.	북한, 제9차 고위급 회담거부 성명
			3.8.	북한, 남북 연석회의 예비회의 개최제안	12.28.	나진·선봉 특구 지정		
			⇒ 12.28.	강영훈, 남북고위 당국자 회담 제안				
			'89. 1.16.	북한, 남북 총리급 회담 동의				
			'90.9.4 ~'92. 9.18.	8회의 남북고위 급회담				

		도 발		대 화		대타협 및 개방		과 기	
제 4 기	'99. 6.15.	서해 무력도발	'99. 6.17.	북한, 북경차관급회담 지속회신	'00. 6.15.	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	?	?	
			'00.3.9.	남한, 대북 지원 베를린 선언					
			⇒ '00.4.8.	정상회담 합의	⇒		⇒		
						'02.8.1 2~현재	각종회담 지속		
	'02. 6.29.	서해 무력도발	'02. 7.25.	서해사태 유감표명, 7차 장관급 회담제의	'02. 11.13.	개성공업지구 선포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대남 정책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바, 그것은 <그림-1>처럼 ‘무력도발→대화제의→대타협 및 대화, 대외개방→대화 파기 및 중지→무력도발’이라는 싸이클(cycle)이다. 필자는 북한 대남 정책의 특징을 대남 ‘공격·포옹(hit and clinch)정책의 반복 경향(tendency)’으로 규정하려 한다.⁹⁾ 이 전제에 근거한다면 북한의 대남 도발 후에는 대화와 대타협에 대비해야 하고, 대타협 후에는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를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9) 북한의 대남정책이 발전적 전진을 하고 있다는 입장은 정성장, 「북한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평가와 대응: 경제개혁과 통일·대남 정책을 중심으로」 (성남: 세종연구소, 2002.12) 참조.

<그림 1> 대남 정책 반복고리



Ⅲ. 북한의 대남 인식

북한이 남한을 정당한 상대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대남 인식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남한을 ‘미제식민지’로 규정하고, ‘해방’시켜야 할 대상으로 상정하는 한편, 남한정권을 ‘파쇼정권’으로 규정하고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부터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¹⁰⁾이 도출된다. 한반도의 분단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 북한의 대남 인식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간 갈등도 남한의 일방적인 북한지지가 없는 한 완전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 미국의 ‘(신)식민지론’

해방직후 김일성은 미국이 한반도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고 ‘괴뢰’정권을 세우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시각은 이후 북한의 대남 인식 기초가 되었다. 김정일 시대인 현재까지도 이러한 관점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한을 식민지로 보는 시각 때문에 북한은 일제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항일무장독립투쟁을 한 것처럼 ‘미제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항미무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핵·

10)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 최초로 정식화된 것은 1970년 제5차 당대회 시 었음. 김일성은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관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쇼통치를 반대하는 인민주주의혁명입니다”라고 분명히 규정하였음.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70년 11월 2일),”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01.

미사일 문제로 미국과 지속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며 ‘선군정치’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도 이로부터 출발한다. ‘민족론’ 및 ‘민족해방론’을 주장하는 이유도 유사하다. 김일성의 ‘미제식민지론’ 주장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6년: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민주력량을 분렬약화시킴으로써 괴뢰정권을 세우고 우리 나라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¹¹⁾

1970년: 남조선에서 미제식민지통치의 붕괴와 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승리는 반드시 오고야 말것입니다.¹²⁾

1982년: 우리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주되는 장애는 미제가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거기에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입니다...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면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건디여내기 어렵게 될것입니다.¹³⁾

1985년: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입니다. 미제는 우리나라

-
- 11) 김일성, “오늘의 정치정세와 우리들의 새로운 임무(북조선공산당 및 조선신민당 중앙위원회 확대런석회의에서 한 보고, 1946년 7월 29일),”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323.
- 12)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70년 11월 2일),” 『김일성저작집 25』, 앞의 책, pp. 311~312.
- 13) 김일성, “핀란드인민민주련맹위원장과 한 담화(1982년 4월 9일),” 『김일성저작집 3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105~106.

라의 절반당인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있으며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을 다시 침략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정권>은 미국과 일본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반동적인 괴뢰정권입니다...남조선인민들의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쇼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용감히 투쟁하고 있습니다.¹⁴⁾

1990년: 남조선에 <대통령>이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을 떼고 붙이고 하는 실권자도 역시 미국사람들입니다...미국의 대조선정책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남조선을 영원히 저들의 식민지로 틀어쥐자는 것입니다.¹⁵⁾

1994년: 조선의 통일문제는 미국사람들에게 많이 달려있습니다.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남조선집권자는 미국사람들이 하라는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에 지나지 않습니다.¹⁶⁾

위와 같은 식민지적 시각은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대화만을 고집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북미평화협정을 제안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본래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남북간 평화협정’을 주장하였다. 1962년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에서 김일성은 “미국군대를 몰아내고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데 대

14) 김일성, “뽀르뚜갈공산당대표단과 한 담화(1985년 1월 7~8일),” 『김일성저작집 3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p. 17~18.

15) 김일성,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범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들 앞에서 한 연설 1990년 8월 18일),” 『김일성저작집 4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380.

16) 김일성, “조선민족은 누구나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재미교포녀류기자와 한 담화 1994년 4월 21일),”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 403~404.

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여야 할것입니다...남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물러가게 하고 남북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무력을 줄이는 것은 조국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중요한 첫걸음으로 될것입니다”¹⁷⁾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1973년 ‘북미평화협정’ 체결로 바뀌었다. 김일성은 197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연설을 통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면 하루빨리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어야 합니다”¹⁸⁾라고 말함으로써 ‘북미 평화협정’을 최초로 강조하였고, 이것은 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 허담 부총리가 “이제는 남조선당국자들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아무리 논의하여도 의의가 없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 조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확실히 담보할만한 실권을 가진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옹당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정전협정의 계약쌍방이며 실제상의 당사자들입니다...우리는 현 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미합중국에 정식으로 제의합니다”¹⁹⁾라고 언급함으로써 북미평화협정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사망직전까지 미국과의 직접대화 의지를 고수하였고, 기본적으로 김정일도 이를 승계하고 있다. 즉, 김정일은 남한을 ‘(미제 식민지의) 괴뢰’로 인식하고 있다.²⁰⁾

17)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제에 대하여(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62년 10월 23일),” 『김일성저작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477~478.

18) 김일성, “올해 사업총화와 다음해 사업방향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연설 1973년 12월 31일),” 『김일성저작집 2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642.

19) 『로동신문』, 1974.3.26.

김일성은 핵문제와 관련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였고, 통일문제에 대해서 까지도 북미간 직접대화 해결방식을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1994년 “지난날 일제는 조선에 총독부를 두고 야만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면 오늘 미국은 남조선에서 저들의 앞잡이를 내세우고 그를 얼리기도 하고 위협도 하면서 신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자주성도 실권도 없는 남조선당국자들과만 대화를 해서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조선당국자들을 좌지우지하는 실제적인 주인인 미국사람들과 대화를 하여 조미관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²¹⁾라고 주장하였다.

2. ‘파쇼론’

남한정권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은 ‘파쇼’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파쇼타도’와 ‘민주정권 수립’을 주장한다. 민주정권 수립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파쇼론’은 남한 최고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도록 한다.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전술적 차원’에서 이러한 성격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 인식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²²⁾ 김

20) 김정일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4월 남한을 ‘남조선괴뢰’로 표현하였음. 『월간 조선』 (2003년 1월호), p. 117.

21) 김일성, “조선민족은 누구나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재미교포녀류기자와 한 담화 1994년 4월 21일),” 『김일성저작집 44』, 앞의 책, pp. 403~404.

22) 북한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김정일은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본성과 야망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간 조선』 (2002년 3월호) ‘북한군학습자료’ 원문은 <http://monthly.chosun.com/html> 참조.

일성의 남한 ‘파쇼론’적 시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1950년: 미제식민지락탈자들은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강점하고 저들의 충실한 앞잡이인 리승만매국도당을 내세워 공화국남반부에 파쇼적인 경찰테로제도를 세워놓았으며 38선을 계선으로 우리나라를 인공적으로 량단하였다.²³⁾

1962년: 극소수의 살인집단인 남조선괴뢰도당은 몽둥이정치로써...어느 한 계급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박정희파쇼테로 <정권>이 오래 유지될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오늘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계속유지하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²⁴⁾

23) 김일성, “미제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의 완전해방을 이룩하자(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 제82호 1950년 8월 15일),” 『김일성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51.

24) 김일성, “총련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총련의장에게 보낸 서한 1962년 1월 30일),” 『김일성저작집 16』, 앞의 책, pp. 58~59.

IV. 북한의 대남 정책 목표

1. ‘북한식 사회주의’ 확산

북한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전한반도의 공산화’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지배정당인 노동당 규약 전문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주주의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²⁵⁾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1998년 수정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²⁶⁾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당의 통일전략인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최종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김정일은 이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만일 이 조항이 폐지된다면 ‘하나의 조선’이라는 통일을 포기하고 ‘두 개의 조선’이라는 분열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어날 것을 김정일이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이 전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계급론적 입장에서 전한반도를 사회주의화하는 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하고 있다. 즉 북한은 평등주의를 주장하고,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계급타파를 주장하고 있다. 가

25) 1980년 당규약 前文 참조.

26) 1998년 9월 5일 개정된 ‘김일성헌법’ 참조.

장 크게 변한 것으로 평가되는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도 공공부문 정상화를 통한 사회주의체제 강화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²⁷⁾ 아울러 북한은 ‘경제관리 개선’을 ‘개혁·개방’으로 보는 서방 세계의 시각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²⁸⁾ 물론 사회주의 고수 의도가 얼마나 지켜질 지는 의문이지만 북한이 어떤 이념을 택하고 있느냐는 것은 북한의 제반 정책을 전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은 “사회주의사상은 계급해방의 무기인 동시에 민족해방의 무기이며 참다운 애국주의사상이다”²⁹⁾라고 말하여 ‘사회주의식 통일’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민족주의적 입장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김정일은 1986년 ‘우리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한 이래 ‘민족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다. 북한이 민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이후부터이다.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인 1931년부터 민족을 강조하였다. 그는 “충있는 사람은 충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며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여 전민족이 반일무장투쟁에 총궐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³⁰⁾라고 주장하였다. 비록 해방 투쟁과정에서 민족통일전선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했지만 민족의 단결을 운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리는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의 평양시 환영대회에서도 강조되었다. 물론 김정일도 김일성의 논

27) 『로동신문』, 2002.8.6.

28) 자세한 내용은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 ‘자본주의타파’ 학습제강 참조.

29)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1995년 6월 19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p. 68~69.

30) 김일성,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연길현 명월구에서 진행된 당및공청간부회의에서 한 연설, 1931년 12월 16일),”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30.

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³¹⁾

김정일은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을 관철하자고 촉구하는 가운데 김일성의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라는 구호를 높이 평가하였다.³²⁾ 김정일은 이것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³³⁾로 정리하였다. 이것은 김일성의 민족통일전선에 입각한 통일 주장을 김정일이 그대로 전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북한은 굳이 계급을 따지지 않는다. 과거에 어떤 신분을 가졌던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북한의 통일논리를 지지하면 ‘김일성 민족’이 되는 것이다.

어떻든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과연 북한이 대남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북한이 대남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자신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북한 군사력은 남한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한에는 주한미군 3만 7천명이 주둔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미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격자는 방어자의 3배에 달하는 군사력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군사적인 적화통일을 위해서는 최소한 남한 및 미국 군사력의 3배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31)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년 8월 4일),” 『김정일선집 14』, 앞의 책, pp. 340~359.

32)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년 8월 4일),” 『김정일선집 14』, 위의 책, p. 345.

33) 자세한 내용은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1997년 6월 19일),” 『김정일선집 14』, 위의 책 참조.

둘째, 남한국민의 절대다수가 적화통일을 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러한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극소수의 남한국민이 ‘친북세력’으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공산화를 반대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이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많은 진보적 인사들을 밀입북시켰으나 이것은 오히려 남한의 ‘반공분위기’만 고취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지난 아시안게임 시 북한팀을 응원하고, 북한응원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을 김정일에 대한 흠모로 해석하는 것은 북한이 아직도 남한사회의 다원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남침한다면 대부분의 일반주민들은 물론 친북인사로 분류된 사람들까지 맞서 싸울 가능성이 높다.

셋째,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북한의 대남 도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적화행동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인 적극적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1950년 한국전쟁도 김일성의 강한 적화의지가 주원인이었겠지만 소련과 중국이 끝까지 반대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³⁴⁾ 현대전은 ‘총력전’이라는 점에서 경제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 경제력은 공장가동률이 20%를 밑도는 등 최악의 상황인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군수공업부문도 50%정도만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국방력은 자위적 차원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따라서 북한이 군사적 대남 적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34) 한국전쟁은 ‘국제적 내전’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김일성의 ‘야욕’에 의해서만 한국전쟁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음, 소련과 중국의 명시적, 암시적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김학준, 「한국전쟁」, 앞의 책 참조.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현재 북·러간에는 자동개입 조항이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북한의 남침을 용인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중국 또한 자국의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을 북한의 군사적 남침을 용인할 상황은 아니다.

어떻든 북한의 대남 정책은 현재까지는 ‘전한반도의 사회주의화’에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능력여부와 관계없이 의지의 문제이다.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건 전한반도를 사회주의화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지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이 수립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관료들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남한의 고유성이 상실되기 전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³⁵⁾

2. 남한 고립화

북한 대남 정책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는 남한 고립화일 것이다. 해방의 대상인 남한이 미·일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체제인 한미동맹을 비난하고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³⁶⁾

그러나 대남 혁명 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노력은 남한의 강력한 ‘반공전선’에 막혀 난관에 봉착하였다. ‘반공전선’ 즉, ‘한·미·일 공조’의 파괴를 통한 한반도 적화 분위기 조성은 커녕 북한 자신의 안보까지 위협받게 되었다. 따라서 반공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은 북한

35) 북한 ‘민화협’ 서기국장 류완철과의 대담. 2002년 5월 9일.

36) 가장 최근에는 2003년 ‘신년공동사설’ 참조.

의 최대현안일 수 밖에 없다. 과거 북한은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중·소 공조를 이룩하였다. 한·미·일 공조 파괴와 관련 김일성은 ‘갓끈전술’을 주장하였다. 남한은 갓과 같아서 양쪽 갓끈인 미국과 일본이 끊어지면 갓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무너진다는 주장이다.³⁷⁾

이러한 논리에서 북한은 한·미 공조 및 한·일 공조 파괴를 위해 지대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북한은 남한내에 반미·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해방 직후 일정기간 반일 분위기를 조성한 것을 제외하고 북한은 반미 분위기 조성에 매진하였다. 북한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제식민지론’ 때문이다. 남한을 ‘식민지 반(半)봉건사회’로 규정해 왔는데,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식민지 반(半)자본주의사회’로 규정, 혼용해오다 1980년 이후부터 ‘식민지 반(半)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해 오고 있다. 이는 남한이 정치체제면에서 미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사회이며, 사회경제구조는 지주, 소작제도 등 봉건적 잔재와 자본의 전근대성, 매관성 등이 중첩되어 있는 반(半)자본주의사회라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미제’와 남한 인민간의 ‘민족모순’과 자본가와 노동자, 지주와 농민, 예속자본가·반동관료배들과 피착취·피압박 근로인민사이의 ‘계급모순’이 중첩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남한의 기본모순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노동자, 농민, 도시 소시민 및 민족자본가들 사이의 모순이라고 규정하며, 특히 주요모순은 ‘미제와 남한 인민’사이의 모순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은 남조선혁명에서 타도되어야 할 1차 대상(주

37) 김일성, “당, 정권기관,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더 잘하여 혁명적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자(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 5기 15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75년 2월 17일),” 『김일성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44.

적)으로 ‘미제’를, 2차 대상으로 ‘미제’와 결탁한 파쇼(남한정권 지칭),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주요모순과 기본모순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선 미제축출, 후 파쑈타도’라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3. ‘민족공조’ 확대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는 전통적인 통일전선 전술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자신의 권력강화를 위해, 통일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였다. 그것을 몇 시기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시대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을 결의하면서 ‘조국광복’을 위해서는 ‘모든 애국력량’은 물론 중국과의 반일통일전선을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즉,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을 결의한 1931년 명월구회의에서 “모두 다 손에 무장을 들고 조국광복을 위한 성전에 떨쳐 나설 때가 왔습니다. 빈부와 귀천, 당파와 종교를 가리지 말고 일제를 반대하는 모든 애국력량을 무장투쟁에 총동원합시다. 총 있는 사람은 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며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어 전민족이 반일무장투쟁에 총궐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의 적 일제를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며 그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비단 조선인민뿐만 아니라 만주에 있는 광범한 중국인민의 대중적지지를 얻어야 합니다”³⁸⁾라고 말하였다.

둘째, 해방직후 통일전선은 ‘반제반봉건혁명’을 통해 ‘인민정권’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모든 정당, 정파와

38) 김일성,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연길현 명월구에서 진행된 당및공청간부회의에서 한 연설 1931년 12월 16일),” 『김일성 저작집 1』, 앞의 책, pp. 30~31.

의 연대를 의미하였다. 김일성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광범한 농민대중과 지식인, 량심적인 민족자본가 등 각계각층의 민주력량을 망라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하며 이에 토대하여 인민정권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전선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설을 위한 통일전선이므로 여기에는 나라의 참다운 주인들인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근로인테리, 도시소자산계급, 량심적인 민족자본가 등 민주주의적독립국가의 건설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이 망라되어야 하며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 일체반동세력들이 기여들지 못하도록하여야 합니다”³⁹⁾라고 말하였다.

셋째, 한국전쟁시기에는 한국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통일전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김일성은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당과와 정전, 신앙을 가리지 말고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인민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지난 기간 조선로동당과 북조선민주당, 북조선천도교청우당은 통일전선의 기치하에 서로 손잡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공화국북반부의 민주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전조선에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우리조국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 오늘 각 정당들은 통일전선을 더욱 굳게 형성하고 전쟁의 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각계각층 인민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합니다”⁴⁰⁾라고 강조하였다.

39)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한 연설 1945년 8월 20일),” 『김일성저작집 1』, 위의 책, pp. 260~261.

40) 김일성,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과업(조선로동당, 북조선민주당, 북조선천도교청우당 도위원회 위원장련석회의에서 한 연설 1950년 6월 27일),” 『김일성저작집 6』, 앞의 책, p. 22.

넷째, 한국전쟁 직후에는 전후복구사업을 위해 통일전선이 필요했다. 김일성은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은 우리 당원들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다 동원될 것을 요구하는 어렵고도 방대한 사업입니다. 우리당원들은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동이 되는 동시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이 사업에 적극 발동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공화국북반부의 민주기지를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⁴¹⁾라고 강조하였다.

다섯째, 1957년부터는 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이 강조되었다. 김일성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애국적력량을 미제와 리승만역도를 반대하는 통일전선에 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결탁한 극소수의 지주, 예속자본가들을 제외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하여 지식인, 수공업자, 상인, 민족자본가, 그밖의 광범한 계층들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만 평화적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⁴²⁾라고 강조하였다.

여섯째, 1960년대 중반 베트남전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국제적인 반제통일전선’이 강조되었다. 김일성은 “반제공동행동과 반제통일전선의 실현은 웬남인민에 대한 지원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할 수 있게하며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저지시키고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있게 합니다”⁴³⁾라고 강조하였다.

41) 김일성, “통일전선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3년 12월 18일),” 『김일성저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197.

42) 김일성,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7년 12월 5일),” 『김일성저작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406.

43)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이다. 북한은 연방제를 비롯한 북한식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일전선 전술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전선이라는 용어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기점으로 ‘민족대단결’로 개념화 되었다. ‘민족대단결론’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및 ‘6·15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민족공조’ 논리로 바뀌었다. 북한이 ‘민족공조’를 강조한 이유는 이 용어가 남한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즉,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남 통일전선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⁴⁴⁾ 물론 북한이 공식적으로 민족을 강조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6년, 김정일이 ‘우리민족 제일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이 시기에 북한이 민족을 강조하기 시작한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국제적 요인으로서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대소 봉쇄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의 페레스트로이카 선언, 중국의 개방 지속 등으로 인해 북한의 고립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남북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일은 사실상 권력장악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민족의 영원인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업적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일성은 1986년 김일성 고급당학교 졸업식에서 ‘후계구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⁴⁵⁾ 따라서 최

년 10월 5일),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400.

44) ‘민족공조’라는 단어는 1994년 4월 12일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가 처음 사용하였고, 북한이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2001년 1월 21일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가 ‘7천만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서였음.

45) 김일성은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라고 말하여 김정일로의 승계가 종결되었음을 분명히 하였음.

소한 1986년부터는 김정일이 대남사업에까지 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부터 김정일은 향후 통일시 ‘통일대통령’을 염두에 두었지 않나 생각된다. 비록 1972년에 ‘민족대단결’이 천명되기는 했지만 계급론이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민족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일시대에 맞는 통일론을 확정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셋째, 남한내에서는 198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반과썌’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고, 사실 대통령 선거 시 민간정부 구성이 확실시 되는 순간이었다. 북한은 이를 겨냥해 향후 민간정부 출범 시 보다 효율적인 통일운동 전개를 위해 민족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록 민간정부 구성은 실패했지만 이러한 생각은 1990년 범민족대회 창설로 이어진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족공조’는 북한이 곤경에 처할수록 더욱 강조하는 논조가 되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 경험(김일성고급당학교창립 50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록 1986년 5월 31일),” 『김일성저작집 4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 101.

V. 북한 대남 정책의 ‘반복’ 사례

1. ‘청와대 기습사건’과 ‘7·4 남북공동성명’ 채택

가. 무장군인 직접 침투

박정희를 ‘파쑸’로 비난하던 북한은 1968년 1월 21일 민족보위성(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124군부대 31명을 직접 침투시켜 청와대를 기습하려다 실패하였고, 동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울진·삼척지역에 120여명의 무장군인을 침투시켜 남한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어서 북한은 1969년 12월 11일 KAL기를 납치하였다. 또한 남한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1월 23일 미정보함 프에블로호를 나포하였으며, 1969년 1월에는 EC-121기를 격추시켰다. 북한은 왜 이처럼 군사모험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였을까? 그 배경을 추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내부 요인이다. 1961년 제4차 당대회를 통해 빨치산 중심의 정권장악에 성공한 김일성은 자신의 독점적 권력 배양에 온 힘을 집중하였다. 권력독점을 위해서는 전사회를 ‘군사국가화’ 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다만 명분은 남한에서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에 의해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섬으로써 ‘남한의 북침’ 가능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1962년 ‘국방에서의 자위’ 실현을 위해 ‘4대군사로선’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이 노선에 따라 국방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증강시켰다. 1966년에는 국방경제병진 정책이 나왔다. 그러나 논쟁은 있었다. 김일성은 “반당반혁명분자들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방해하였습니다...또한 일부 나쁜놈들은 다른나라에서도 다 총

을 생산하는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로선이 무슨 새로운 로선인가고 하면서 당의 로선을 시비하였습니다”⁴⁶⁾라고 말하여 상당한 반대가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이것은 후에 ‘군벌’을 숙청하는 원인이 되었다.

김일성은 1966년 당총비서가 된 후 개인 권력의 절대화에 더욱 매진하였다. 1955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주체사상을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만들고 이를 모두 다 무조건 따르도록 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1967년 당 제5기 15차 전원회의를 통해 숙청하였다. 또한 소위 ‘5·25교시’를 통해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배치되는 모든 책을 불사르는 ‘북한판 분서갱유’를 저질렀다.⁴⁷⁾ 이 때 숙청된 사람들은 박금철, 이효순, 김도만 등 이른바 ‘갑산파’들이었다. 이들의 숙청을 지켜 본 김창봉, 허봉학 등은 김일성에게 더욱 큰 충성을 하려 하였다. ‘사회정치적생명’을 존속케 해 준 김일성에 대한 보은인 것이다. 군부가 생각해낸 것은 박정희를 암살함으로써 김일성을 기쁘게 해주자는 것이었다. 아마 이것은 김일성이 직접 지시는 하지 않았더라도 암시를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희만 죽이면 남한이 붕괴될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과거 김일성, 현재의 김정일만 죽으면 북한체제는 곧 붕괴하리라고 생각한 것이나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군은 군사모험주의를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한 내에 북한을 동경하는 세력이 많은 것을 선전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⁴⁸⁾ 그러나 이들도 ‘군의 유

46) 김일성, “현정세와 인민군대 앞에 나서는 몇가지 정치군사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255.

47) 성혜량, 『등나무집』 (서울: 지식나라, 2001), pp. 312~313.

48) 북한은 ‘1·21사태’를 ‘남조선무장유격대’의 소행으로 돌리고 있음. 김일성,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전쟁준비를 잘할데 대하여(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상군인들과 도당책임비서들 앞에서 한 연설 1968년 3월 21일),” 『김일성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79.

일사상 체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숙청되었다. 정책의 실패는 김일성의 노선인 주체사상을 훼손하는 것으로 되어 책임을 면치 못하는 관례가 생겼던 것이다.

둘째, 남한내부 요인이다. 1961년 당시 박정희 소장은 쿠데타를 통해 약체정권인 장면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는 '반공'을 국시로 삼았다. 박정희는 한때 공산주의자로 몰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반공의 가치를 더욱 높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남한의 정서가 반공주의 일색이었기 때문에 이를 거역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 못지 않게 김일성 집단을 비난하였고, 언젠가는 복속되어야 할 대상으로 김일성을 지목하였다. 모든 군대의 구호도 "때려잡자 김일성!"일 만큼 김일성에 대한 증오심을 국민들에게 주입시켰다. 더구나 박정희는 '선건설 후통일'론을 주장하는 등 통일보다는 체제 경쟁에 보다 많은 정열을 쏟아 부었다. 경제건설을 위해 박정희는 1965년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그리고 1966년에는 근대화 자금 확보와 무력증강을 위해 비록 비전투부대이기는 하지만 비둘기부대의 월남파병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도 심하였으나 모두 강압적으로 제압하였다. 1967년 7월 8일에는 동백림거점 북한 대남공작단 사건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남한의 반공의식을 고취시킨 반면 북한에게는 커다란 좌절을 주는 것이었다. 김일성으로서는 박정희를 증오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1967년 6월 7대국회의원 선거는 혼탁하게 이루어졌고, 신민당은 '6·8부정선거백서'를 발표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반박정희' 정서를 감안, 박정희계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제환경적 요인이다. 1·21사태 직전까지의 월남전 상황은 공산월남이 미국을 곤경에 몰아 넣으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때였

다. 미국은 월남전 승리를 위해 50만명에 가까운 병력을 투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월남으로서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중주국으로 자처하는 중국과 소련은 이념분쟁에 여념이 없어서 베트남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가 싫어 북한은 1966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 논설 "자주성을 옹호하자"를 통해 중·소 양국을 비난하고 '외교에서의 자주'를 표방하였다. '사회주의 동포애'를 중시한 북한은 공산월남에 대한 원조와 함께 미국의 전력 분산을 위한 '제2전선' 형성을 기획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대남도발뿐만 아니라 미국을 직접 겨냥한 프예블로호 나포, EC-121기 격추 등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북한의 반미 행동 때문만은 아니지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69년 7월 25일 미국의 아시아 퇴각을 알리는 '괘독트린'을 발표하였다.

나. 「7·4남북공동성명」 채택 과정

북한의 박정희 제거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김일성은 대남 군사작전 실패책임을 물어 민족보위상 김창봉, 군총참모장 최광, 대남공작 총책 허봉학 등을 숙청하였다. 김일성은 청와대기습 실패를 자신의 권력강화 기회로 활용한 것이다. 빨치산 활동을 함께 했던 갑산파까지 숙청한 김일성은 1970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제5차 당대회를 개최하였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은 북한은 6개년 경제계획을 발표하였다.

6개년계획 완성을 위해서는 서방의 지원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김일성은 판단한 것 같다. 김일성은 1971년 8월 6일 남한의 민주공화당 등 모든 정당·대중단체·인사와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였다. 이

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8월 12일 남북이산가족찾기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고, 북한이 이를 수락,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해방 이후 최초로 남북한 당국자가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그 배경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환경의 변화이다. 미국은 월남전의 질곡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동양으로부터 퇴진하기 시작하였다. 닉슨 대통령이 1969년 7월 25일 꾀독트린을 발표한 것이다.⁴⁹⁾ 요지는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이 핵위협을 받으면 방어를 책임지지만 기타의 위협에 대해서는 동맹국 자신들이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아시아문제는 아시아인들끼리 자주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1970년 2월 18일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는 대외회보고서로 구체화되었다. 소위 ‘닉슨독트린’이라고 불리는 이 보고서에서는 동서간 ‘평화공존’과 미국의 월남철수 및 주한미군 감축이 공식화되었다. 한편 한반도와 함께 분단의 상징이었던 독일에서는 1970년 3월 19일 동독 에르푸르트에서 동서독 수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동서화합의 장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미·중간 데탕트는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1971년 4월 10일 미국탁구선수들이 북경에 도착하였다. 소위 ‘핑퐁외교’가 시작된 것이다. 1971년 7월 키신저 미국 안보담당 보좌관이 북경을 비밀리에 방문, 닉슨대통령의 중국방문 합의를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닉슨대통령은 1972년 2월 중국을 방문하여 2월 27일 ‘미·중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평화원칙에 합의하였다. 이 성명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남북한의 교류증진을 지지하였다. 베트남에서는 공산월남군이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둘째, 남한내 요인이다. 박정희는 1970년 8월 15일 광복절경축사를 통해 북한을 ‘선의의 체제경쟁대상’으로 인정하였다. 김일성은

49) 자세한 내용은 <http://www.time.com/time/special/moy/1971.html> 참조.

1971년 8월 6일 남한의 민주공화당 등과 접촉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고, 남한은 우리 민족의 염원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남북간의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8월 14일 북한 적십자회는 대한적십자사에 편지를 보내 이산가족, 친척, 친구의 자유왕래 토의 등이 포함되는 판문점회담을 역제안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1·21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요청한 이유는 민족적 과제로서의 통일문제 해결이라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 정통성 부족을 민족문제 해결로 보상해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내부 요인이다. 1970년 5차당대회에서는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으로 만들어진 주체사상이 통치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하였다. 김일성은 1967년부터 시작한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박차를 가하였고, 그의 절대화를 위해서는 민족문제 해결과 경제문제 해결도 주요과제였다. 따라서 민족문제해결과 관련, 197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회의시 허담은 '8개항의 평화통일방안'⁵⁰⁾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과도적 연방제'와 이산가족의 안부 및 면회가 제외되었다.

경제문제와 관련, 북한은 6개년경제발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OECD 국가들로부터 외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⁵¹⁾ 김일성은 "국제적인 지지성원이 있는 이상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인 것입니다"⁵²⁾라고 말하여 국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해 평화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1971년 8월 6일 "남한 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대중정당·단체인사와 접촉

50) 국토통일원,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III』 (1988), pp. 358~360.

51) 최주환, 『북한경제론』 (서울: 대왕사, 1992), p. 192.

52)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폐회사(1970년 11월 13일)." 『김일성저작집 25』, 앞의 책, p. 382.

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고, 8월 12일 남한의 대화제외가 있었다.

또한, 1971년 9월 20일부터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된 것을 필두로 10월 6일 제3차 예비회담까지 개최되었다. 남북적십자 회담은 1973년 7월 11일까지 7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남북 적십자회담과는 별도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의 신임장을 지참한 남북실무자간의 비밀접촉이 시작되었다. 남한적십자사의 정홍진과 북한적십자사의 김덕현은 제9차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 다음날인 1971년 11월 20일부터 11회에 걸쳐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가면서 실무접촉을 갖고, 이후락·김영주의 남북 교환 방문에 대한 사전조율을 마쳤다.

이러한 준비 하에 이후락 부장은 3명의 수행원과 함께 1972년 5월 2일 판문점을 경유,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하였다. 남북관계사상 최초로 ‘밀사외교’가 시작되었다. ‘밀사외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시에도 사용되었다. 이후락은 5월 5일까지 3박4일동안 평양에 체류하면서 김일성과 2회, 김영주와 2회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동위원회’ 구상도 밝혔다.⁵³⁾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에 이미 북한의 구상은 끝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김일성은 청와대 기습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과거의 일”이라는 식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⁴⁾ 북한의 ‘고백외교’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다.

53) 김일성,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대표들과 한 담화 1972년 5월 3일, 11월 3일),”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165, 180.

54) 정홍진의 증언, <http://indosea.com/parkjh/실록박정희/실록박정희/02html>.

김일성은 김영주 대신 박성철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3박4일간 서울에 파견하였다. 박성철은 이후락과 2회, 박대통령과 1회 회동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은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각각 3~5명의 쌍방대표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위원회 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간에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1972년 7월 4일 '7·4 남북공동성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통일3대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비방·중상 중지 및 무장도발 중지, 다방면적인 교류 실천, 남북적십자회담 성사에 협조,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등 7개항이다.

갑작스럽게 발표된 내용은 남한사회를 뒤흔들었고, 김종필 총리는 7월 5일 국회답변을 통해 7·4공동성명은 초보적인 합의이고,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은 폐기하지 않으며, 북한은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매우 불쾌한 반응 보였다.⁵⁵⁾ 결국 7·4남북공동성명은 출발부터 그 결말이 보이는 것이었다.

다. 남북조절위원회 중지

남북조절위원회는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본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장기집권계획인 '10월 유신'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해산되었다. 또한

55) 김일성, “스웨리예사회민주당청년동맹대표단과 한 담화(1972년 10월 19일),” 『김일성저작집 27』, 앞의 책, p. 460.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정치적 이용문제가 최초로 불거졌다.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구국의 결단’으로 미화시켰지만 개인독재의 장기화 정책임이 분명하였다. 박정희는 7·4남북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7월 5일 반공교육을 계속 할 것을 지시하였고,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였다.

북한도 1972년 12월 25일 주석제를 포함한 사회주의헌법을 공포하였다. 북한이 강력한 권력구조를 바탕으로한 사회주의헌법을 공포한 계기가 남한의 10월유신에 대한 대응인가의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김일성이 사회주의헌법 채택에 앞서 행한 연설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에서 밝힌대로 “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내외적대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⁵⁶⁾하기 위한 것이 헌법 개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김일성은 남한의 정치정세와 무관하게 자신의 정권강화를 위해 헌법 개정을 단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행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간에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박정희는 1973년 6월 23일 UN동시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7개항의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골자로 한 ‘조국통일5대강령’을 발표하였다.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동시에 발표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1973년 8월 8일 일본 동경에서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하였다. 김대중은 1971년 4월 27일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의 유력한 라이벌이었다. 북한은 1973년 8월 28일 박정희의 ‘6·23선언’이 두 개조선 노선의 공개적 선포라는 이유로 남북조절위원회 운영

56) 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2년 12월 25일),” 『김일성저작집 27』, 위의 책, p. 605.

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대중납치사건이 원인이었다.

이후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가 1973년 12월 5일부터 1975년 3월 14일까지 10회에 걸쳐 판문점에서 개최되었으나 1974년 8월 15일 박정희 암살기도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 요인이 많아 중지되고 말았다. 1976년 8월 18일에는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사건'이 발생하여 미북간에는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다. 그러나 김일성이 8월 21일 유엔군사령관에게 유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일단락되었다.

2. '아웅산 테러' 사건과 최초의 '이산가족상봉'

가. 남한 요인 테러

북한은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를 방문중이던 전두환을 비롯한 한국정부의 요인들을 테러하기 위해 아웅산묘소에 폭탄을 장치, 폭발시켰으나 전두환 제거에는 실패하고 정부관료 4명을 포함해 17명을 사망케하고 14명을 부상시켰다. 북한은 자신의 소행임을 부인했으나 1983년 11월 4일 버어마 정부는 북한의 소행임을 확인하였다.

북한이 남한요인 테러를 자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내 요인이다.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통해 정식후계자가 된 김정일은 대외부문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대남정책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정일은 1980년에 새롭게 수립된 고려연방제 통일전략과 대남 혁명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유리한 여건과 새로운 국면타개를 목표로 하였던 것이었다.⁵⁷⁾

57)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전략」, 앞의 책, p. 263.

또한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된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을 당내에 과시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둘째, 남한내 요인이다. 1979년 ‘12·12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써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을 받았다. 전두환은 국민적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였고, 이것은 더욱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박정희 저격사건시의 인식을 전두환에게도 그대로 적용한 것 같다. 즉 전두환은 인기가 없는 정치인이므로 테러를 통해 제거해도 ‘반북정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남한사회는 급격한 혼란상태로 빠질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수 있다. 아울러 남한 내에는 광범위한 ‘친북세력’이 생성되어 있어서 전두환이 제거되면 ‘친북정권’이 등장하리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⁸⁾

나.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및 예술단 공연

북한의 전두환 암살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남한내에 ‘반북분위기’만 고조시켰다. 전두환 정권은 북한의 호전성을 더욱 부각시켜 정권 안보에 이용하려 하였다. 북한은 요인 암살로 인한 남한내 반북분위기 반전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1984년 1월 11일 ‘남한당국’을 포함한 3자회담을 제안하고 ‘서울당국’에 보내는 서한을 채택하였다. 남한은 동 일자로 남북한간 직접대화를 강조하고 남북고위급책임자회의를 제안하였다. 한미 양국은 1979년 7월 1일 3자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7월 10일 이를 거부했었다. 1984년 3월 7일 북한의 강성산은 남북 직접대화를 거부했으나 3월 30일 LA올림픽에서의 남북단일팀 구성을 남한에 제안하였고, 4월 2일 남한은 이

58)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전략』, 위의 책, p. 263.

를 받아들였다. 4월 9일에는 단일팀 결성을 협의하는 남북올림픽대표의 제1차 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남북체육회담은 순조롭지 못했다. 1984년 8월 21일 전두환은 북한에 기술과 물자를 무상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으나 8월 25일자 '로동신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남한에서는 큰 수해가 발생하였고, 북한 적십자사는 9월 8일 남한의 수해에 대해 구호물자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체제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였지만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계기마련을 위해 9월 14일 이를 수락하였다.

전두환 정부의 수해물자 수락은 북한으로서는 의외의 일이었을 지도 모른다. 당시 아웅산 사건으로 인해 남한내 반복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9월 18일 판문점에서는 6년 9개월 만에 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고, 9월 30일 인천항과 북평항에 수재물자를 실은 북한화물선이 도착하여 10월 4일 하역이 완료되었다.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점은 대남 수해물자 제공제의 날짜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합영법을 발표한 날짜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합영법은 서방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었다. 합영법은 5장 26조로 구성되었고, 제1장에서는 기본사항 및 합영대상과 범위, 제2장에는 합영회사의 조직 및 출자비율, 제3장에는 이사회 및 경영활동, 제4장에는 결산 및 분배, 제5장에는 해산 및 분쟁해결 등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수재물자를 지원하면서 남한에 뭔가 기대한 것이 있었을까? 물론 수재물자 제의를 건의했던 대남담당 비서 김중린이 남한이 수재물자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철직'당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설부른 판단은 금물이다.⁵⁹⁾ 그

러나 북한으로서는 수재물자 지원을 통해 동포애를 보여줌으로써 남한의 반복 분위기를 달래 보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대남 수재물자 지원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이후에 남한은 1984년 10월 6일 이산가족 문제를 다룬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를 호소하였고, 북한은 10월 29일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왔다. 따라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본회담 예비접촉이 11월 20일 판문점에서 개최되었으나 1985년 1월 22일부터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8차 본회담은 팀스피리트 훈련 문제로 연기된 후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8차 본회담에서는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취재기자 30명 및 진행위원 20명 등 총 151명이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역사상 최초로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 졌고, 서울과 평양에서 예술공연이 있었다. 이것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이산가족 상봉과 각종 상호방문의 표준이 되었다.

다. 적십자 회담의 중지

민족의 숙원사업인 이산가족 상봉은 애석하게도 1회에 그치고 말았다. 역사적인 1986년 2월 26일 평양에서 개최기로 한 제11차 남북 적십자회담은 1986년 1월 20일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중단한 이후 개최되지 못하다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김일성이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한 이유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김일성은 남한이 자유왕래 실

59) 서울신문사, 『북한인물집』 (2001년).

현을 거부하는 이유가 “남북사이에 자유래왕이 실현되어 남반부인민들이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직접보고 느끼게되면 그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용감히 떨쳐나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때문입니다”⁶⁰⁾라고 말하여 이산가족 상봉 목적이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임을 내보였다. 그리고 김일성은 이산가족 문제가 원만히 풀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불신이 해소되는 ‘정치적 합작’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¹⁾

그렇다면 적십자회담을 중지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우선 미국이 1986년 ‘한미 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대한 반발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의 회담 입장과 자세의 차이가 남북대화의 장애라고 간주했다. 김일성은 “우리의 립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를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하려는 립장이라면 남조선측의 립장은 미국의 <두개 조선> 정책에 따라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립장입니다”⁶²⁾라고 말하였다. 결국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매개로 남한이 미국의 입장에서부터 분리되기를 바랐으나 이러한 기미가 없자 회담을 결렬시킨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웅산 사건과 관련한 빛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한을 만나주는 것 자체를 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후 이산가족 문제는 북한이 남한을 제어하거나 남한의 지원을 극대화시키는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60) 김일성,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전국교원대회에서 한 연설 1971년 12월 27일),” 『김일성저작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576.

61) 김일성,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7』, 앞의 책, p. 189.

62) 김일성, “일본사회당 기관지 《샤가이신보》 편집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일성저작집 3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184.

3. 'KAL기 폭파사건'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가. KAL기 폭파사건

1987년 12월 16일의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해 상공에서 한국의 중동근로자들을 태운 KAL858기가 공중폭발하여 115명의 무고한 인명이 사망하였다. 더구나 이것이 북한의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소속 김현희 소행으로 밝혀지면서⁶³⁾ 남한주민들의 분노는 매우 컸고,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의식도 보수화됨으로써 대통령선거에서 집권당 후보인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물론 이것은 '조작'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고,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이 사건은 북한이 남한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북풍'의 원조가 되었다. 북한은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

첫째, 1987년 12월 16일에 있을 예정인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구심이 있다. 북한이 테러를 하면 남한이 보수화되어 자신들이 싫어하는 노태우 후보가 유리할 텐데 이것을 잘 아는 북한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이러한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북한의 대남 정세 파악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고의로 남한에 보수정권이 등장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권유지에 유리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는 해석이다. 만일 후자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남한과의 갈등구조를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대남 전략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

63) 자세한 내용은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1, 2』 (서울: 고려원, 1991) 참조.

다.⁶⁴⁾ 북한은 남한과 피나는 체제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남한의 위상을 세계 속에 알리는 계기가 되는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는 것이 자연스런 행동일 것이라는 점이다. 비록 이러한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북한의 속성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1988년 9월 3일 서울올림픽 불참을 선언하였다. 북한이 2002년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나. 남북고위급회담 전개 및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KAL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1988년 1월 1일 '남한집권자'와의 대화를 희망하여, 3월 8일에는 북한이 남북연석회의 예비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장기간 침묵을 지키던 남한은 1988년 6월 3일 북한측에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6월 6일 남북연석회담 준비를 위해서라면 당국자회담도 고려한다고 화답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은 7월 7일 소위 '7·7 선언'을 발표하였다. 특징적인 내용은 북한을 경쟁·대결·적대 대상이 아니라 신뢰·화해·협력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점, 북한과 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돕겠다고 밝힌 점 등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12월 28일 강영훈 총리가 남북고위당국자(총리급) 회담을 제안하였고, 1989년 1월 16일 북한은 남북총리급회담을 수락하면서 "2월 8일에 차관급예비회담을 갖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의제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역사상

64)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공작』, 앞의 책, p. 265.

최초로 남북한 총리가 남북문제를 논의하는 회담이 시작되었다. 1990년 9월 4일 남북고위급회담 1차회담으로부터 1992년 9월 18일 제8차 회담까지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은 역사적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 ‘합의서’는 가장 완벽한 남북간 합의로서 이것만 잘 실천되면 ‘사실상(de facto)’의 통일상태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의서는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등 4장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 ‘2개국가’를 부정하였다.

북한이 역사상 가장 합리적이라는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국제환경 변화이다. 1985년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등장한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 체제강화를 위한 체제개혁에 착수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와 그라스노스트로 대변되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은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탈소 및 탈공산주의를 촉진시켰다. 1989년 9월 28일 소련은 동유럽에 대한 군사개입을 정당화시켜온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폐기하였다. 동유럽의 탈소화는 급격히 진행되었고, 동구는 급속히 붕괴되어 1990년 10월 1일 동서독은 통일되었다. 동구붕괴의 물결은 북한에게까지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었다. 비록 소련이나 동구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다르지만 북한도 세계사적 변화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대처해야 했을 것이고, 그 피난처가 남한과의 대화에 응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북한의 변화는 1990년 9월 24일 자민당의 거물정치인 가네마루 신의 방북과 이후 북일수교회담으로도 감지되었다.

둘째, KAL기 사건 이후 남한내에서 부상하기 시작한 반북분위기를

잠재울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남한의 자신감은 사회주의권 붕괴와 맞물려 북한을 압도하였다. 여기에서 1989년 3월 25일 남한의 진보적 인사인 문익환 목사가 밀입북, 김일성과 면담하고 4월 2일 문익환·허담간 '9개항 공동성명서'⁶⁵⁾를 발표하였다. 이 내용은 매우 과격적이었다. 북한의 통일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듯한 표현들은 남한사회를 경악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4·2 남북공동성명서' 제6항에는 '점진적 연방제 통일제안'이 명기됨으로써 1991년 김일성에 의해 제기된 '느슨한 연방제'의 시원이 되었고, 이것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의 모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⁶⁶⁾

셋째, 북한내부 요인이다.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통해 외자유치를 시도하였으나 조총련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더구나 1987년부터 시작한 '제3차 7개년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외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일성은 외자유치를 위해 1987년 5월 20일, 1989년 11월 5~7일 등 2회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고, 1988년 7월에는 몽고와 소련을 방문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사회주의권 붕괴 분위기와 맞물려 '진영외교'가 퇴색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1989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도 많은 외화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적 압박은 극에 달하였다.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 특구'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과의 협력은 더욱 절실했을 것이다.

65) 자세한 내용은 문익환목사 홈페이지 www.moom.or.kr/moon/tongi12.html 참조.

66) 이완범 박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음. 이완범, “북한통일방안 변천에 관한 연구,” 통일부, 『통일정책』, (2001 신진연구자논문집 I), p. 182.

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미이행

남북고위급회담은 8차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1992년 12월 19일 북한은 '1993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이인모 노인 북송,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는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 KAL기 폭파사건으로 남한에 진 빚을 청산했다고 북한은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 자체를 큰 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1993년에 출범하는 신정권과의 관계도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북한은 신정권과 거래할 카드로 진전된 대화의 장을 남겨둔 것이다.

둘째, 북한은 1991년 9월 UN에 동시가입하였고, 1992년부터는 핵문제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으로서는 남북대화에 매달릴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다.

셋째, 김정일은 1990년 4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취임했고, 1991년 12월 인민군최고사령관직을 획득하였다. 1992년 4월에는 '공화국 원수' 칭호를 획득하였고, 1993에는 1992년 헌법수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강화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 명실상부한 군사부문 최고자가 되었다. 명실상부한 실권자가 된 김정일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몰려올 수 있는 남북대화보다는 대화단절을 통한 체제단속의 필요성이 높았을 것이다.

4. '6·15 서해사태'와 남북정상회담

가. '6·15 서해사태'

북한은 1999년 6월 15일(6월 7일부터 월선) 서해 NLL을 침범, 남한해군과 군사적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남한은 물론 주변국을 놀라게 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김대중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유용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물론 이 시점까지도 북한은 <표-2>에서 보는 것처럼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의 진의를 파악하려는 의도는 있었겠지만 김대중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는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김대중에 대한 김일성의 시각은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김일성은 1973년 “우리는 남조선에서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주인사가 정권을 잡으면 그와 협력하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⁶⁷⁾라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민주인사’는 김대중을 지칭한 것이다. 김일성은 1975년 “당신들이 김대중과 같은 민주인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고 물었는데 우리는 그를 만나본적이 없으므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남조선신문을 통하여 김대중을 좀 알고있을 뿐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김대중에 대하여 평가한 것이 있다면 그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 선거공약에서 평화적조국통일의 구호를 들고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진보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객관적립장에서 평가하였을뿐입니다”⁶⁸⁾라고 말하여 ‘민주인사’가 김대중임을 분명히 하였다.

67) 김일성, “단마르크와 조선사이의 협조관계촉진위원회대표단과 한 담화 (1973년 9월 3일),” 『김일성저작집 28』, 앞의 책, p. 474.

68) 김일성, “일본교도통신사대표단과 한 담화 (1975년 8월 31일),” 『김일성저작집 30』, 앞의 책, pp. 442~443.

<표 2> 북한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 사례

날짜	매체	내용
1998. 7. 6	평양방송	햇볕정책은 북침정세를 가리우기 위한 술책
1998. 8. 7	로동신문	사대매국, 반민족·반통일대결정책
1998. 8.21	평양방송	대북화해정책을 뒤집어 놓은 반북대결정책
1998. 9.13	평양방송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요설
1998. 9.29	로동신문	햇볕론의 허구성 비판
1999. 2. 3	김용순	조국통일3대원칙에 배치, 반북대결정책
1999. 2.11	조선중앙통신 비망록	햇볕정책은 반북대결정책, 반통일정책
1999. 2.20	로동신문	반북대결정책
1999. 2.23	이형철 UN대사	역대정권에 비해 덜 적대적
1999. 4. 6	조평통 서기국	우리제도에 대한 부정을 전제로 한 반북대결정책
1999. 5. 3	평양방송	반북대결정책
1999. 6. 4	로동신문	식민지제도의 공화국까지 연장 술책
1999. 6.12	조선중앙통신	반북대결정책(그 누구를 알보고 옷을 벗기자는 심히 모독적이고 도전적인 것)
1999. 8.19	로동신문	반북대결정책

* 출처: 『연합뉴스』, 해당 방송.

첫째, 대미 압박용이다.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북미제네바 핵 합의 이후 미국의 경수로 건설 지연에 대한 불만을 수 차례 표명해 왔다.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위한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였다. 특히 미

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및 전력지원 획득을 위한 전술이었다. 북한은 1998년 8월 22일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을 천명하였다. 특히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이 경제강국 건설을 천명한 것은 '외부예비' 도입에도 매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은 8월 26일 금창리에 핵시설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반드시 이에 대응한 조치는 아니었지만 북한은 8월 31일 '3단계 로켓' 시험발사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남한, 미국, 일본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북·미 및 북·일간에는 미사일 문제가 첨예한 의제로 등장하였다. 금창리 핵의혹 시설에 대한 문제는 1999년 5월 핵시설이 없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북미간에는 미사일 문제로 첨예한 대립각이 세워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대미 압박 강화를 위해 NLL을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경제강국 건설을 표방한 북한은 군부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외화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기 때문에 군부로서도 서해 꽃게잡이를 통해 외화 획득을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우연히' 월선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6월 7일부터 지속적으로 NLL을 침범했다는 것은 정치군사적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NLL은 정전협정상의 경계가 아닌 미군의 편의에 의해 구획된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197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아왔고, 북한은 매년 수십 차례에 걸쳐 NLL을 침범해 왔다. 그러나 1999년 6월 7일부터 시작된 NLL 침범은 상당히 조직적인 행동이었다. '6·15 교전'을 통해 북한해군은 대패했으나 북한은 9월 2일 인민군총참모부 명의로 NLL 무효화를 선언하고, 2000년 2월 23일에는 '서해통항질서' 및 새로운 경계를 발표하였다.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전술이 그대로 표현된 사건이었다.

둘째, 김정일 권위 제고용이다. 김정일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

민회의 제10기 1차회의를 통해 국방위원장에 재취임하였다. 재취임 후 그는 ‘선군정치’를 강조하였다. ‘선군정치’란 용어는 정확히 10월 21일 ‘중앙방송’을 통해 나왔으나 이전부터 ‘선군혁명령도’나 ‘선군후로’라는 용어는 나왔다. 어쨌든 이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군부를 앞세워 모든 문제를 풀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최고사령관인 김정일로서는 그의 용맹성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 대상은 물론 미국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미국과 동일시되는 남한에 대한 도발로 대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셋째,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시험이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인 1998년 4월 북경에서 대북 비료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협의를 위해 개최된 남북 차관급회담이 결렬되었다. 이후 당국간 회담은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한 반면 동년 6월 및 10월에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각각 소 500 및 501마리씩 총 1001마리를 대동, 북한을 방문하는 행사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현대와 북한은 금강산관광 계약을 체결하였다. 금강산 관광은 분단 이후 최초로 1998년 11월 18일 시작되었다. 현대는 6년 동안 9억 4천 2백만 달러를 금강산관광 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북한에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남한내에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층이 늘었고, 통일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⁶⁹⁾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대북 포용정책을 ‘화평연변’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지원 확보에 앞서 김대중 정부가 진정으로 대북 지원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남한의 군사정부에 대한 도발 이유와는 약간 다른 것이었다. 즉, ‘1·21사태’나 ‘아웅산테러사건,’ ‘KAL기폭파사건’ 등이 남한군사정권에 대한 응징의 성격이 강했다면 ‘6·15 서해사태’ 사건은 김대중 정부의 ‘민족공조’에 대한 의지

69) 『한겨레신문』, 2000.5.9.

의 시험이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렇다고 북한의 대남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다.

나.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1999년 '6·15 서해사태'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은 지속되었다. 북한은 6월 21일부터 예정된 북경 차관급회담의 참석의사를 6월 17일 밝혔다. 대화지속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었다. 그러나 차관급회담은 결렬되었다. 남한의 '6·15사태'에 대한 집요한 사과요구 때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은 9월 북미대화가 지속되는 한 향후 3년간 미사일시험발사를 유예하고 EU와의 관계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세계에 공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은 2000년 1월 4일 이탈리아와 수교하였다. 북한의 개방적 태도를 목도한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월 20일 새천년민주당 창당대회에서 남북정상회담 제의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후 북한은 남한의 진의 파악에 나섰고, 남한의 진의가 확인되자 이를 공식화시켜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3월 9일 베를린에서 대북 SOC 지원을 골자로 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3월 17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박지원과 송호경이 '밀사외교'를 시작하였고, 4월 8일 남북 정상회담을 6월 12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6월 12일보다 하루 늦은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김정일은 세계정치 무대에 등장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는 소득을 올렸다. 남북정상회담은 '6·15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회동을 마무리지었다. 그 내용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

의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 친척방문단 교환 및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당국간 회담 개최, ‘적절한 시기’의 김정일 답방 등이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김정일 위상 강화 목적이다. 그동안 서방세계에 비이성적 존재로 각인되었던 김정일은 정상회담을 통해 ‘화려한 변신’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이후 김정일은 휴전선에서의 대남비방 방송 중지, 6·25 행사 중지 등을 시행하고 표류어선을 즉시 석방함으로써 ‘호전적’ 이미지를 제거하려 노력하였다.

둘째, 정상회담의 성공을 발판으로 김정일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화 즉, 우상화 작업에 매진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발판으로 김정일은 통일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을 것이다.

셋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98년에 천명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지원이 필수적이었으나 이들 국가들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권유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북한은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은 실질적 측면에서도 남한의 대북 SOC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 임한 것은 사실이다.

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큰 틀에서 순탄한 길을 걸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8차례의 장관급회담, 1차례의 국방장관 회담, 3차례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4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 및

4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동해선 연결공사, 금강산육로관광
가시화,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 특구 지정 등 수 없이 다양한 회담
및 합의이행이 있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은 '6·15 공동선언' 이후 비교적 잘 지켜진 회의
로서 8회 실시되었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주로 이산
가족 상봉 문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활성화,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 문제, 군사실무회담 재개 문제, 금강산관광 활성화 문제, 임진강
공동개발 문제, 개성공단 착공 문제, 한국전쟁 시 실종자 생사 확인
문제, 부산아세안게임 참가 문제,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분단 이후 최초로 2000년 9월 25일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 임무인 남북국방장관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회담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민간인 왕래·교류 보장 관련 군사적 문제 상호 적극 협력, 긴
장완화·공고한 평화 구축·전쟁위협 제거 공동 노력, 철도·도로 연
결을 위한 인원·기재의 DMZ 출입 허가, 철도·도로 주변의 군사분
계선과 비무장지대를 남북관할지역으로 설정 등이 합의되었다. 이를
근거로 이후 남북군사실무협의회가 <표 4>에서 처럼 7차례 개최되었
고,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을 위한 지뢰제거과정에서 유엔사와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철도·도로연결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

<표 3> 남북장관급 회담 일람

회수	기 간	개최 장소	공 동 보도문	주 요 합 의 내 용
제1차	2000. 7.29 ~ 7.31	서울	6개 합의사항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8.15에 즈음, 남과 북, 해외에서 남북공 동선언을 지지·환영 및 실천 결의 행 사 개최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 연결
제2차	2000. 8.29 ~ 9. 1	평양	7개 합의사항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2차례 추가 실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문제 협의 ○입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공동 추진
제3차	2000. 9.27 ~ 9.30	제주도	6개 합의사항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설치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 소 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문 제의 조속한 타결
제4차	2000.12.12 ~12.16	평양	8개 합의사항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제3차 이산가족 교환(2001년 2월말, 100명) ○이중과세,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를 각 기 발효절차를 거쳐 상대방에 통보
제5차	2001. 9.15 ~9.18	서울	13개 합의사항	○당국간 대화, 협력과 함께 민간차원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 ○금강산관광 활성화 위한 당국간 회담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제6차	2001.11. 9 ~11.14	금강산	합의 무	
제7차	2002.8.12 ~14	서울	10개 합의사항	○제2차 남북경추위개최 ○철도·도로 연결 위한 군사당국자간 회담 ○제4차 남북적십자 회담 ○금강산관광활성화위한 당국자 회담 ○입남담공동조사 실무접촉
제8차	2002.10.19 ~22	평양	8개 합의사항	○핵문제의 대화 해결 ○개성공단 12월중 착공, 남측 사무소 설치 ○한국전쟁 실종자 생사주소 확인

* 출처: 통일부, 「대북정책 추진 현황」(2002.12.), pp. 28~29.

<표 4> 남북 군사분야 회담 주요 일지

-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2000.9.25, 제주도)
-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2000.11.28, 통일각)
- 제2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2000.12.5, 평화의 집)
- 제3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2000.12.21, 통일각)
- 제4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2001.1.31, 평화의 집)
- 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2001.2.8, 통일각)
 - “남북관리구역의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타결
- 제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2002.9.14, 평화의 집)
 -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타결
-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2002.9.16, 통일각)
-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2002.9.17, 평화의 집)
 - 쌍방 국방장관이 서명한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교환·발효

* 출처: 통일부, 「대북정책 추진 현황」(2002.12.), p. 33.

다른 어느 분야보다 경제분야는 남북간 협력이 잘 이루어 졌다. 2000년 9월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을 시작으로 2002년 11월 14일 까지 3차례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경 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1차적으 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단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되도록 조치가 취해졌고, 11월 13일 개성공업지구 선포 및 11월 20일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등이 이루어졌다. 2002년 12월 하순 개성공단 건설이 착공될 예정이다.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 지 북한의 실세인 장성택을 비롯해 박남기 등이 8박 9일간 남한경제 실태를 고찰하는 일도 있었다.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이 2차례 개최되었다. 제1차는 2001년 10월, 제2차는 2002년 9월 10일~12일 금강산에서 개최되

었다. 특히 제2차 회담은 ‘금강산 관광 대가 지불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장 문제’에 대한 남북간 입장 차이로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동해선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대로 금강산 육로 관광 실시, 관광 특구 지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았다.

제1차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는 2002년 9월 13일~17일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철도·도로공사 착공식, 연결구간 및 시설구조 등 실무적 사항들에 대한 합의서’와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경의선은 개성공단을 감안하여 4차선으로, 동해선은 2차선으로 연결하도록 하고, 출입심사·검역·통관 절차를 위한 철도 분계역은 비무장지대 밖의 편리한 위치에 각기 건설하도록 하였다.

남측과 북측 분계역까지는 우리측 방식인 디젤 기관차 견인방식으로 연결하도록 하였다.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는 공사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1차분은 9월 안에, 나머지는 공사일정에 맞추어 원산항과 해주항 등을 통해 북측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자재·장비는 차관방식으로 제공, 자재와 일부 장비는 공여로, 일부 장비는 임대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드디어 2002년 9월 18일 분단 50여년 만에 역사적인 경의선 철도·도로와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남과 북이 동시에 거행하였다.

2002년 9월 16일~18일 금강산에서 열린 「임남담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남과 북은 공동조사의 필요성과 공동조사의 원칙에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북한의 ‘명예훼손 보상’ 요청으로 결렬되었다. 200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평양에서 임진강실무협의회가 개최되어 대부분의 사항에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북측이 묘목 제공 문제와 관련, 남측의 지원을 요구해 합의문 등을 이끌어 내는데에는 실패하였다.

개성공단 건설 사업은 2002년 8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건설의 금년내 착공'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종합경제협력단지' 건설이 가시화 되었고, 11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12월 하순 착공 합의하였다. 개성공단은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로서 총면적은 2,000만평(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이고 개발소요기간은 3단계에 걸쳐 8년 정도이다. 1단계로 100만평을 2003년까지 완공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우선 300-400개의 노동집약적 사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필요한 전력, 통신 등 외부기반시설 건설은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남과 북은 그 동안 4차례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방문단 교환(5회), 생사·주소 확인(2회), 서신 교환(1회) 등을 합의·추진하였다.

2002년 8월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에서 북한측은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개최되는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북한 올림픽위원회 실무자간 회담이 2차례(8.17~19, 8.26~28) 금강산에서 개최되어 북측 선수단·응원단 규모, 개·폐회식 남북동시입장, 백두산 성화 채화 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10월 14일 아시안게임 종료시까지 별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대회에 참석하였고, 특히 북한 '미인응원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지대하였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이유는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류이다. 물론 북한이 경제난 해결과 대미관계 개선이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채택한 것도 사실이지만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논리이다.⁷⁰⁾ 특히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나 ‘신의주특구 지정’ 등은 대표적인 대북 포용정책 성과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변화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⁷¹⁾

한편 남북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부문도 있다. 김정일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2차 국방장관 회담도 개최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 요인이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3월 9일 한미 정상회담 시 김정일을 ‘회의적’ 인물로 평가하였고, 2002년 2월 20일 한미 정상회담 시에는 ‘김정일 정권과 주민간의 구별’ 대처를 강조하였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김정일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남한방문 시 그의 신변안정 보장을 두려워하도록 제어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은 ‘핵개발’ 등 군사적 방어수단에 대한 선호를 높게 만들었다. 2002년 10월 17일 이후 본격화된 ‘핵개발 시인’ 문제와 관련 북한은 ‘북미 불가침조약’을 주장하였다.

둘째, 국내적 요인이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이유는 김대중 정부의 2002년 3월 9일 ‘베를린선언’에 대한 기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4·13 총선’ 참패로 인한 ‘여소야대’를 극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북 퍼주기론’이라는 비판으로 인해 대

70) 자세한 주장은 최성,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일정권의 대남·대외정책,”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02년 상반기호, 제14권 1호) 참조.

71) 찬반론에 대한 정리는 이동형, “한국의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 『북한체제의 변화진단과 대남·대외 정책』 (통일연구원·한국세계지역학회 주최 학술회의, 2002년 11월 29일), pp. 11~14 참조.

북 경제지원 약속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와 함께 일부 보수층은 김정일 방문 시 위해를 가할 의사를 피력,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지도부의 신변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김영삼 전대통령, 이철승씨, 재향군인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북한 요인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남북대화를 북미대화로 가기 위한 단계로만 활용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은 대남 혁명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하지 않고 있고, '미제신식민지론'에 입각한 대남 인식으로 인하여 아직도 남한을 '해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은 남한을 정상적인 협상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약속 불이행에 대한 죄의식도 희박하다.

VI. 결 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남북관계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또 하나의 ‘사변’이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없다는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 민족은 이제 ‘한반도문제를 한반도화’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긍심은 지난 2002년 1월 29일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후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써 현저히 악화되었다. 미국이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는 민족통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다시 자리를 잡았다. 이 즈음 비관론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동년 6월 29일 발생한 ‘서해사태’이 그것이었다.

통일에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은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는 논리가 설득력 있게 회자되었다. 북한은 우리의 대북 지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왜 북한은 주기적으로 대남도발을 자행하는가라는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북한의 대남 행태가 2중적이라는 분석은 많아 왔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내는 논리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장 전제부문에서도 전제했듯이 북한의 대남 정책에 어떤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에서 대남정책 ‘반복경향’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이 전제가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북한은 적화통일 정책을 고수한 가운데 무력도발을 시도한다. 북한은 남한 최고통치권자에 대해 1968년 1월 21일, 1974년 8월 15일, 1983년 10월 9일 등 3회에 걸쳐 위협을 가하려 하였다. 비록

남한 대통령이 독재자라 할지라도 북한의 테러에 의해 제거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었다. 테러행위는 독재자의 반공논리를 정당화시켜 주었고, 민주인사의 탄압과 군사국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북 불신은 더욱 심화되어 활발한 남북대화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무고한 시민이 탑승한 KAL기를 폭파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로부터 ‘테러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현재까지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에게 ‘테러국가 꼬깔’을 벗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테러를 포기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은 도발행위를 자행한 이후 남한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남한의 호응이 있으면 대화에 임하고 대타협까지도 이끌어 낸다. ‘7·4 남북공동성명,’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전세계에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남한에게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신호로 작용한다. 아울러 북한은 대체로 남북대화와 함께 대외개방을 시도하였다. 왜 북한이 남북대화와 비슷한 시점에 대외개방을 시도하는 가는 의문이다. 북한이 대외개방을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남 도발을 하지 않아야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개방은 서방세계에게 대남 도발의 호전성 및 대남 도발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북한은 대타협을 중지하거나 파기한다. 북한은 대타협을 온갖 이유를 붙여 중지한다. 그 이유는 대체로 남한내 군사훈련이 빌미가 된다. 대타협을 통해 남북한이 대화하자면서도 남한이 ‘북침연습’을 한

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에 불과할 뿐 남한을 ‘식민지’로 인식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자주권이 없는 남한에 대해서는 약속을 파기해도 별 상관 없다는 인식의 발로이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개방정책도 별무성으로 남는다는 점이다. 물론 서방세계의 적극적인 투자가 없는 것이 주 요인이겠지만 북한도 개방정책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이러한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만은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대남정책을 대남 ‘공격·포용(hit and clinch)정책의 반복’으로 규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 대남 정책 변화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대남도발 후 대화 제의 및 대화의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에는 2002년 6월 29일 서해사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7월 25일 대화제의를 해왔다.

둘째, 남한정권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 대응이 존재하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취함에 따라 북한은 ‘6·15 공동선언’ 채택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대화를 중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군사정권이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과는 다른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북한의 대남 도발 이후에는 대화 및 대타협에 대비해야 할 것이고, 대타협 이후에는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에도 북한이 ‘공격·포용(hit and clinch)정책의 반복’ 경향에 맞는 행동을 할지는 미지수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구태의연한 냉전적 정책을 지속하기에는 그들의 경제사정이 너무 열악하고, 향후에는 남한의 어떤 정권이 등장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바, 남한을 ‘식민지파쇼’로만 몰아부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임무는 북한의 ‘반복적’ 대남 정책을 ‘발전적’ 대남 정책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고안해 내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 국토통일원,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Ⅲ」, (1988).
- 김학준, 「한국전쟁」, 서울: 박영사, 1993.
-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1, 2」, 서울: 고려원, 1991.
- 서울신문사, 「북한인물집」 (2001년).
- 성혜량, 「등나무집」, 서울: 지식나라, 2001.
-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전략」, 서울: 북한연구소, 1997.
-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 정규섭, 「김정일체제의 대남정책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12.
- 정성장, 「북한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평가와 대응: 경제개혁과 통일·대남정책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002.12).
- 최주환, 「북한경제론」, 서울: 대왕사, 1992.

나. 논문

- 손호철, “대북 포용정책과 남남갈등,” 『남북한 관계의 회고와 전망』(2002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2002.7.25~27)
- 이동형, “한국의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 『북한체제의 변화진단과 대남·대외 정책』 (통일연구원·한국세계지역학회 주최 학술회의, 2002년 11월 29일).

- 이완범, “북한통일방안 변천에 관한 연구,” 통일부, 『통일정책』 (2001 신진연구자논문집 I).
- 정규섭, “햇볕정책을 넘어서: 논쟁과 대안을 모색,” 『현대북한연구』 제4권 2호(2001).
- 최성,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일정권의 대남·대외정책,”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02년 상반기호, 제14권 1호).
- 최완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성찰적 접근,” 『남북한 관계의 회고와 전망』(2002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2002.7.2 5~27).
- 허문영, “북한의 평화전략,” 김학성 외, 『한반도평화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0.

다. 기타

- 『월간 조선』 (2003년 1월호),
- 『월간 조선』 (2002년 3월호) ‘북한군학습자료.’
- 『한겨레신문』, 2000.5.9.
- 조선노동당 규약 前文(1980년).
- ‘김일성헌법’(1998년 9월 5일).
- <http://monthly.chosun.com/html>.
-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 ‘자본주의타파’ 학습제강.
- <http://www.time.com/time/special/moy/1971.html>.
- <http://indosea.com/parkjh/실록박정희/실록박정희02.html>.
- <http://www.moom.or.kr/moon/tongil2.html>.

2. 북한문헌

김일성, “김구와 한 담화 (1948년 5월 3일),”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70년 11월 2일),”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김일성, “오늘의 정치정세와 우리들의 새로운 임무(북조선공산당 및 조선신민당 중앙위원회 확대런석회의에서 한 보고 1946년 7월 29일),”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일성, “핀란드인민민주련맹위원장과 한 담화(1982년 4월 9일),” 『김일성저작집 3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일성, “뽀르뚜갈공산당대표단과 한 담화(1985년 1월 7~8일),” 『김일성저작집 3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김일성,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범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앞에서 한 연설 1990년 8월 18일),” 『김일성저작집 4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김일성, “조선민족은 누구나 조국통일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재미교포녀류기자와 한 담화 1994년 4월 21일),” 『김일성저작집 4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과제에 대하여(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62년 10월 23일),” 『김일성저작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일성, “올해 사업총화와 다음해 사업방향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연설 1973년 12월 31

- 일), 『김일성저작집 2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김일성, “미제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의 완전해방을 이룩하자(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 제82호 1950년 8월 15일),” 『김일성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일성, “총련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총련 의장에게 보낸 서한 1962년 1월 30일),” 『김일성저작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김일성, “당, 정권기관,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더 잘하여 혁명적대사변을 승리적으로 맞이하자(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5기 15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75년 2월 17일),” 『김일성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김일성,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연길현 명월구에서 진행된 당 및 공청간부회의에서 한 연설 1931년 12월 16일),” 『김일성 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한 연설 1945년 8월 20일),”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김일성,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과업(조선로동당, 북조선민주당, 북조선천도교청우당 도위원회 위원장련석회의에서 한 연설 1950년 6월 27일),” 『김일성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일성, “통일전선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3년 12월 18일),” 『김일성저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김일성,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7년 12월 5일),” 『김일성저작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년 10월 5일),”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일성, “조선로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김일성고급당학교창립 50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록 1986년 5월 31일),” 『김일성저작집 4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김일성, “현정세와 인민군대 앞에 나서는 몇가지 정치군사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김일성,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전쟁준비를 잘할데 대하여(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상군인들과 도당책임비서들 앞에서 한 연설 1968년 3월 21일),” 『김일성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폐회사(1970년 11월 13일).”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김일성,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대표들과 한 담화 1972년 5월 3일, 11월 3일),”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김일성, “스웨리에사회민주청년동맹대표단과 한 담화(1972년 10월 19일),”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2년 12월 25일),”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김일성,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전국교원대회에서 한 연설 1971년 12월 27일),” 『김일성저작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김일성,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김일성, “일본사회당 기관지 《사가이신보》 편집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일성저작집 3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김일성, “단마르크와 조선사이의 협조관계촉진위원회대표단과 한 담화(1973년 9월 3일),” 『김일성저작집 2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김일성, “일본교도통신사대표단과 한 담화(1975년 8월 31일),” 『김일성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1995년 6월 19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1997년 8월 4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1997년 6월 19일),”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로동신문』, 1974.3.26.

『로동신문』, 2002.8.6.

『로동신문』, 2003.1.1.